第252回國會 (臨時會)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錄 第 1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5年2月21日(月)

場 所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주요현안 보고
   가. 통일부소관
2.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3.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4. 6·25전쟁납북자명예회복및지원에관한법률안

審査된案件

1. 주요현안 보고 ····· 2
   가. 통일부소관
2.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고진화 의원 대표발의)(고진화·강창일·김기현·김영춘·김재윤·박세환·박재완·엄호성·염동연·이상락·이원영·이재창·이해봉·장복심·정성호·진수희 의원 발의) ····· 49
3.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황우여 의원 발의)(황우여 의원 외 120인 발의) ····· 49
4. 6·25전쟁납북자명예회복및지원에관한법률안(전여옥 의원 대표발의)(전여옥·엄호성·이강두·이인기·진영·유기준·정종복·나경원·박찬숙·황진하·황우여·박계동·권영세·안택수·이윤성·이상득·안상수·서병수·고경화·박재완·김재원·박순자·안명옥 의원 발의) ····· 49

(14시12분 개의)

○위원장 임채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국회 제1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의사일정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새해 들어 첫 번째 열린 위원회인 만큼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통일 및 외교통상 분야에 대해 많은 고견과 좋은 대안들을 제시하여 정부의 통일외교정책의 수립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0일 북한이 6자회담 불참 및 핵보유 선언을 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노력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일·중 등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을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북핵문제 등 주요현안들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중순 국회사무처 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김성원 심의관이 전문위원으로 승진하였으며 박창현 입법조사관과 신문근 입법조사관이 새로 보임되어 왔습니다.

김성원 전문위원, 박창현 입법조사관, 신문근 입법조사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1. 주요현안 보고

가. 통일부소관

(14시14분)

○위원장 임채정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통일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존경하는 임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남북관계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통일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첫 번째 상임위입니다마는 북한의 6자회담 불참선언과 관련된 대책을 보고드리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2월 10일 북한 외무성 성명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과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기반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유의하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북핵 불용,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유관부처,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도 할 말이 있으면 6자회담에 나와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천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북핵상황 변화를 감안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관계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곧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인 남북협력사업들은 최근의 상황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신중히 다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현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시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초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이후에 변동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기획관리실장이 된 홍양호 실장입니다.

통일정책실장을 맡게 된 이관세 실장입니다.

남북회담사무국장이 된 황하수 사무국장입니다.

정보분석국장으로 부임한 김남준 국장입니다.

새로 교류협력국장을 맡게 된 김천식 이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장관, 오늘 보고해야 할 양이 많을 것 같으니까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먼저 최근 남북관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성공단 건설사업입니다.

2월 10일 북한의 외무성 성명 발표 이후에도 북측 인력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 인원·차량도 이전처럼 통행하는 등 공단개발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2100여 명의 남북인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고 이 가운데 북측 인원이 1700여 명입니다.

시범단지는 금년 상반기 본격 가동을 목표로 공장 건축과 기반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개 입주기업 가운데 2개의 기업은 이미 준공되어서 돌아가고 있고 9개 기업은 공장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전력과 통신은 3월 중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1단계 100만 평 부지조성공사는 현재 4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시범단지는 예정대로 금년 상반기 중에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프라의 조기 구축, 보험·의료·산업안전 등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협력기금 대출 등을 통한 기업활동 지원 등입니다.

본단지 분양은 공사 진도, 북핵 추이 등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1차 5만 평부터 추진하되 전략물자·원산지 문제가 없는 업종과 기업을 중심으로 분양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용수·폐수·폐기물처리장 등 기반시설 건설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남북경제협력의 현황입니다.

남북경협은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사업

등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의선·동해선 도로연결공사는 작년 11월 말에 완공돼 인원 차량 물자의 원활한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강산관광사업도 육로관광 정례화와 관광상품 다양화, 호텔 등 편의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작년 남북교역은 6억 9000만 달러에 이르렀고 금년에도 증가추세입니다. 2005년 1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34%가 늘었습니다.

추진방향은 남북 간에 이미 합의한 경협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의선·동해선 도로 개통행사와 철도 시험운행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강산특구 종합개발계획의 조기 확정과 개성관광 실현 등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핵문제가 해결되면 추진할 포괄적·구체적 경협방안에 대한 세부 실천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인프라 확충과 산업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협력방안을 강구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병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문화교류와 대북 인도적 지원입니다.

사회문화교류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남북관계 소강국면 속에서도 민간 차원의 대북교류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60주년 및 6·15선언 5주년이 되는 해로 양대 개념행사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치르기 위한 준비기구 구성을 추진 중입니다. 6·15 행사와 8·15 행사를 각각 평양과 남측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과 북 그리고 해외 민간단체들로 공동행사 추진기구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북측 준비위원회는 작년 12월에, 남측 준비위원회는 올 1월 말에, 해외준비위원회는 2월 말에 결성되어서 3자간 협의를 거쳐서 3월경에 공동기구 구성을 추진하게 됩니다.

정부는 남북공동행사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종교 학술 체육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입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우리의 부담능력과 국민적 공감대,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긴급구호와 농업 분야 그리고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한 복구지원을 병행하겠습니다. 특히 영양부족 등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일시 중단되었던 민간단체 모니터링이 작년 11월 중순부터 재개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남북회담 분야입니다.

지난해 8월 1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무산된 이후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 간 대화의 중단으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실질 협력관계의 본격 진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속히 남북 간 대화채널을 복원해서 핵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남북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기조를 견지하면서 북측의 당국 간 대화 호응을 지속 촉구해 가겠습니다. 경제협력과 민간차원의 교류를 지속해서 대화 재개 분위기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대화가 다시 열리면 남북장관급회담을 중심으로 한 남북회담 체계 복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당면과제인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북 설득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개성공단 건설과 철도·도로 연결 등 주요 경협사업의 본격 진전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회담도 재개해서 군사적 신뢰 구축과 긴장완화 추진 등 안보와 협력의 균형 있는 진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외무성 성명의 평가와 대책방향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6자회담 참가 무기연기에 관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성명의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성명은 외무성 성명이라는 형식을 통한 의사 표명이라는 점, 핵무기 보유에 관한 최초의 공식적·공개적 언급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북한은 그간 주요 계기 시마다 자신들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핵보유 발언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2003년 4월 3자회담 비공식회동 시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있고 핵무기를 공개할지 양도할지는 미국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었고, 2003년 8월 6자회담 때도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1월 백남순 외무상은 평양을 방문한 미국 의원들에게 '북한은 현재 핵보유국이다. 방어목적이고 영구히 보존할 의사가 없다' 등 모두 10여 차례 핵보유에 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성명은 외무성 성명이라는 공식적 형식을 취했으나 핵보유 발언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도 '북한은 과거에도 종종 입증되지 않은 것들을 말해왔던 만큼 실제 핵무기를 보유했는지는 확실히 모른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제4차 6자회담이 재개되기 전에 협상력을 제고하고 미국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6자회담 틀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기보다는 6자회담 참가 명분과 재개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핵보유 거론을 통해 문제의 시급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유리한 협상여건을 조성해 보려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부의 조치사항입니다.

북한의 이번 성명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불이익을 심화시킬 뿐이므로 하루빨리 비핵화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와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과 북핵불용원칙에 입각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제1조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식 아래 정부는 성명 발표 직후 NSC 상임위를 소집해서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6자회담 참가 무기중단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6자회담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뒤이어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북측의 기본의도가 협상력 제고에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한·미·일 공조 강화와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6자회담 조기 개최를 위한 제반 노력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2월 16일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는 북한의 6자회담 조기 복귀와 진지한 협상을 통한 합리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한중, 한러, 한일 외교장관의 전화협의 또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등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향후 대책방향입니다.

성명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로는 국제사회는 북한의 성명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차분한 대응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성명을 협상력 제고용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일치된 분석이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6자회담 조속 복귀를 촉구해 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개성공단을 비롯한 3대 경협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등 당국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화해협력의 큰 흐름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무성 성명 이후 현재까지 북한 내부의 특이동향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2월 17일 러시아 무용단 접견과 공연관람 등을 공개했고 현재 2월 10일 이후 아홉 차례 공개 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16일 김정일 위원장 생일 관련 각종 행사와 연례 동계군사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볼 때 외무성 성명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정세 변화 조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과거에 비해 강경하고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 동향을 더욱 면밀하게 주시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 대책방향입니다.

북핵 문제는 북핵 불용,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기조를 유지하되 이번 성명의 심각성을 충분히 유의하면서 대처해 가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유관국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유관국 간 다자 또 양자 등 다각협의를 진행해서 6자회담 모멘텀을 잃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북한이 또 다른 추가적 악화조치로 협상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남북관계는 최근의 상황변화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신중하게 다루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당국 간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남북경협은 기존에 예정된 사업일정을 진행해 나가면서, 특히 개성공단사업은 미국 등과의 긴밀한 협의 아래 진행해 온 만큼 그대로 추진해 갈 방침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되 비료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국민정서와 여론, 남북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가겠

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남북 행사는 합의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 비교적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반기문 장관께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셔서 하신 일련의 발언들과 관련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반기문 장관께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과정에서 대규모 남북 경제협력을 해 나갈 계획이 없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일단 사실관계 여부와 통일부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갔다온 설명을 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온 남북협력 기조를 유지해 갈 것이고 또 대북협력사업 등도 흔들림 없이 갈 것이지만 그러나 북한도 협조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영 위원 반기문 장관께서 방미 당시에 미국에서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경제협력의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진위 여부와 또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장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구체적으로 경제협력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하는 명시적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과 우리 정부 간에 긴밀한 조율이 남북협력과 관련해서 필요하다 하는 주한미대사의 언급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영 위원 아직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이 미국 정부로부터 우리 정부에 전달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지난번 워싱턴을 방문했던 반기문 장관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남북경협과 관련한 특정한 태도를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이화영 위원 다시 반기문 장관께서 방미 당시 개성공단사업을 작은 규모의 시범 프로젝트이고 대북 지원은 제한된 쌀과 비료를 제공했다고 다소 우리 남북 간의 경제협력과 남북 간의 교류에 대해서 좀 축소지향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남북관계의 앞으로의 발전에, 남북관계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일부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임채정 위원장, 유선호 간사와 사회교대)

○통일부장관 정동영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남북 간의 협력사업 특히 경제협력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남북관계가 북핵 관련해서 사태가 출렁거릴 때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또 국내의 경제적인 영향도 극소화될 수 있었던 데는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진행해 온, 일관성 있게 진행해 온 남북협력사업이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남북협력에 관한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북한도 좀 협조를 해야 한다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화영 위원 그러니까 반기문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그 뉘앙스가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일정한 압력을 넣고 있는 것 같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경제협력을 좀 축소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대북 민간지원에 대해서도 좀 축소하기를…… 제재조치하려고 하는 경향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미리 우리가 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 같은 것을 축소시켜서 별것 아닌 사업인 것처럼 얘기한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들이 국민 사이에 있습니다.

예컨대 개성공단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남북경협의 가장 상징적인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작은 규모의 시범 프로젝트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외교부장관께서 발언한 것들은 현재의 남북관계 진행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통일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입장을 제안해서, 아니면 NSC 차원에서 좀 조율을 해서 미국에 대한 입장을 좀 발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외교부장관님께서도 금방 제가 설명드린 기조에는 특별히 변함이 없다 하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또

그런 요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화영 위원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에 관련돼서 기반시설 부족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의 개선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전력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개성공단에 2개 업체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제일 큰 애로사항이 전기 문제지요. 발전기를 돌려서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른바 배전방식, 전봇대를 세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달 말이면 거의 완료돼서 3월 초에는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입니다. 통신 문제도 3월 중에는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한 당면한 불편사항들은 곧 해결될 것입니다.

○이화영 위원 북한 핵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안정적 관리노력의 상징이 개성공단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사업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주의 있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남측에서도 국민들 상태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것도 이 사업이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대정부질문에서도 그렇고 오늘 장관 업무보고에서도 비료지원 요청에 대해서 아직까지 입장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미국에서 비료지원 문제를 신중하게 해 달라는 시그널이 있어서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우리 정부의 입장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정동영 비료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1월 중순에 적십자사 채널을 통해서 북한 적십자사 장재언 위원장 명의로 대한적십자사 한완상 총재 앞으로 50만t 비료지원에 관한 요청이 왔습니다.

적십자에서는 이 문제는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될 문제라는 입장을 그동안 북에 전달했고 앞으로 당국 대화가 시작되면 여기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로서는 대규모라는 양의 문제가 있고 또 국민적 합의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결론을 낸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화영 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북측에서 초청한다면 북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서 북측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북한으로 초청해 줄 의사를 한번 타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대북특사로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초청한다면 방북할 수 있다는 의사를 오늘 아침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히셨는데요. 김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한 깊은 조예와 관심을 죽 가져오셨기 때문에 이게 성사된다면 최근 북한 외무성 성명 이후에 고조되고 있는 북핵에 관한 염려, 위기상황 해소에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화영 위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전까지는 방북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했었는데 오늘의 입장은 그것보다 진일보된 의사인 것 같아 보입니다. 남북관계의 대화채널이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런 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도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麗玉 委員 요즘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 장관께서 지난번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내용을 중심으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14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북한 외무성의 영문성명 제목을 핵보유 선언이라고 하지 않고 6자회담 참가에 대한 무기 연기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장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핵보유 선언이 아니라 핵보유 주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영문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한글로 된 것이나 영문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정 장관은 기자 생활도 하셨는데 제목만 보고 내용은 아무 상관하지 않으실 리는 없다고 봅니다.

영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we have manufactured nukes for self-defence”, manufactured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주장입니까? “we have manufactured”, ‘우리 만들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거짓답변을 하셨습니까? 해석이 잘못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전 위원님께서 해석하신 대로 국문 성명에도 '자위를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田麗玉 委員 제 얘기는 왜 '이것은 북한의 핵보유 주장이다. 핵보유 선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핵보유 선언 아닙니까? 이런 것을 선언이라고 하지 뭘 선언이라고 얘기합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제가 말씀드린 핵심요지를 전 위원님은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핵보유 선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 언론이나 의원님들이 해석하시는 것과 정부가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북이 핵을 보유했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되면……

○田麗玉 委員 그 얘기는 대정부질문에서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그만 듣겠습니다. 제가 다 읽어 보고 왔고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북한 외무성의 성명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우리의 외교부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또한 북한에서 내는 성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 성명은 어떤 단계의 것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통일부장관 정동영 북한 정부의 외무성의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이지요. 북한은 93년 3월 12일 NPT를 탈퇴하면서 정부성명 형식을 취한 바도 있습니다. 북한이 뭐라고 말하건 간에 그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문제의 실체입니다. 북한 외무성이 성명을 냈다고 해서 우리 정보기관, 관계당국이 평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평가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田麗玉 委員 지금 하신 말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다 하신 것입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그날 한 것은 반복하지 말아 주시고요.

아까 정부성명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공화국성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외교성명의 경우는 단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이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 외무성 성명이라는 것은 단계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외무부에서 거기에 맞게 성명을 냈다는 것 자체도 안일한 대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핵무기 선언 이후에 정책기조 변화를 얘기하는 나라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폴 월포위츠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말씀하신 바로 그날 반기문 외교부장관에게 북한이 비료 50만t을 요청한 데 대해서 미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우리 정부가 북한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것도 변화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8일에 부시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핵사태에 대해서 입을 연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북한 핵보유 선언으로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됐다' 이렇게 단언했고 하원청문회도 열렸습니다. 이런 것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상당한 정책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정책 변화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기조의 변화를 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부시 대통령의 언급을 포함해서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 북한 총리가 공식서명한 92년 2월 발효된 공동선언을 사실상 그동안 무실화해 왔고 또 북한 외무성 성명은 비핵화 공동선언의 위배의 폭을 더 넓힌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심각성에 정부는 유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가 용인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하에 어떻게 하면 비핵화 상태로 유지 복원될 수 있겠느냐에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田麗玉 委員 그렇습니다.

지금 장관 말 그대로 안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만의 하나에 대비하는 것이 안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핵물질 또는 거기에 대한 주장이다 그러면 어떤 때에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만에 하나 안보에 결정적인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는 '선언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책임자로서 참으로 무책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 장관께서는 북한이 외무성에서 핵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기 바로 1주일 전에 6자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지

난번에 개성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셨는지 도무지 그쪽하고 조율이 되지 않아서 상대방에서 격에 맞지 않는 대표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외교의 미숙 또는 NSC 상임위원장으로서 제대로 판을 읽지 못한 또는 정세분석도 미숙했다, have manufactured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선언이 아니고, 만든 것이 아니라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대변인 성명이라든가 NSC 상임위원장 성명으로 냈어야 격이 맞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정 장관으로서는 이번에 상당히 미숙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에서 자신의 실책의 원인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글쎄요, 질의 속에 답을 담아서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정부가 신중한 대응기조를 잃지 않았다고 봅니다.

○田麗玉 委員 정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 장관 개인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뭔가 잘 됐으면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떤 점에서 자신의 판단 미스가 있었으며 북한의 정세에 대해서는 어떤 점에서 잘못 짚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국민 앞에 밝혀야 온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잘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1주일 전에 그런 말을 했다면 이런 사태가 올 것을 예측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고 어떤 점에서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는가를 얘기하셔야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사실관계를 인용하실 때는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田麗玉 委員 뭐가 부정확합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부정확한 게 있습니까? 정확한 얘기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우리 정부는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

○田麗玉 委員 아니, 제가 뭘 부정확하게 얘기했습니까? 저는 매우 정확하게 팩트에 의해서 며칠, 며칠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부정확하다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취소하셔야 됩니다. 뭐가 부정확합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 미숙하다고 얘기하려면 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시라는 말씀입니다.

○田麗玉 委員 그러면 성숙하셨습니까? 말장난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한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관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미숙하다 이런 말을 왜 못 합니까? 그러면 어느 누구도 장관에게 그런 말 못 합니까? 그런 자세는 장관으로서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부정확하게 한 게 어느 점이 있습니까? 미성숙한 것은 다른 의제로 놔두고 부정확하게 지적한 게 뭔지 얘기해 보십시오. 한 개도 없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6자회담 유관국들이 그동안 많이 노력해 왔고 제가 말씀한, 그러니까 인용하신 것이 2월 7일인가요, 라디오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북한의 선택과 결단이 임박했다 그리고 시간을 끄는 것은 국제사회에도 득이 되지 않고 또 북에도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2월 16일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이 지나고 나면 어쨌든 북한이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 전후에 평양을 다녀온 미국 의원이든 미국 국무성이든 러시아 외무장관이든 모두가 빠르면 2월 말, 3월 초에는 6자회담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는 강한 기대들을, 희망들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6자회담이 열리기를 기대했고 또 희망했습니다.

그 예측이 빗나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을 뭐라고 비판하시든 자유이겠습니다.

○田麗玉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가의 중대한 자리에 있는 분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 장관, 결국 정보라는 것은…… 지금 정보의 범람시대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국가의 안보를 맡고 있는 분이라면 어느 것이 진실인가를 살피고 결론을 내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결여됐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청와대도 당황하고 NSC도 당황하는 이런 북핵 사태가 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핵보유 주장이라는 것을 임시국회 내내 주장하셨는데 그러면도 핵물질 보유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정부의 공식입장은 세 가지, 지금 설명드릴까요?

○田麗玉 委員 아니요, 시간도 없으니까 이것만 대답하십시오.

핵무기 보유는 주장이다 이렇게 언급하셨지만 핵물질은 북한이 갖고 있다, 이것은 회의록에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정부의 기본 입장은……

○田麗玉 委員 맞느냐, 틀리냐……

○통일부장관 정동영 국방백서에도 나와 있고 제가 답변한 것에도 나와 있고, 일관되고 명백하고 확실하게 국민들 앞에 그동안 설명해 왔습니다.

○田麗玉 委員 그러니까 명백하게 핵물질 보유는 하고 있다 이렇게 국회에서 대답했는데 그것이 맞느냐 이걸 묻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국회에서 답변한 것이 저의 판단과 생각을 얘기한 것이지요.

그것을 맞느냐 안 맞느냐고 물으시면……

○田麗玉 委員 그러면 틀린 얘기했습니까? 정 장관!

○통일부장관 정동영 맞는 얘기지요.

○田麗玉 委員 그렇지요.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묻겠습니다.

미국은 북핵 관련해서 이른바 레드라인이라는 것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줄곧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드라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물질을 해외로 이동시키거나 또는 핵 실험을 하는 경우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시 행정부로서는, 부시뿐만 아니라 오늘 하원에서 온 하원의원들하고 한미의원연맹에서 세미나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핵물질의 해외 이동에 대해서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매우 우려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 장관께서 북한이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우 우려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설사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거의 주장에 가깝다, 선언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것은 매우 우려해야 될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즉 지금과 같이 대화라든가 타협, 6자회담을 기다리고 있다 또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유화되게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려해야 될 일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정부도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田麗玉 委員 그러면 그 우려에 대해서 정 장관께서는 'have manufatured'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주장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우려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토씨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북한은 분명히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국하고 일본은 '그런 것이 틀림없다. 그런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만 핵무기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 '주장에 근거한다. 이것은 선언이 아니다' 그 이유를 한 마디로 얘기해 보십시오.

○위원장대리 유선호 정리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정동영 정부가 핵무기를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의 발표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田麗玉 委員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추정하고 있습니다.

○田麗玉 委員 그러면 있다고 보십니까? 핵무기를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통일부장관 정동영 핵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그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田麗玉 委員 됐습니다.

이제까지 그것은 단지 주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갖고 있다고 추정했다면 저는 이것이 지금까지 나온 북한의 성명에 대해서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까지 국회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다음에 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위원 최성 위원입니다.

앞선 질의를 들으면서 동료 위원으로서 좀 착잡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정부를 상대로 한 질의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은 민족 생존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국익과 국민을 위한 초당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든 야든 사소한 말꼬투리 잡기나 또 미묘한 표현들이 근거 없는 추론 때문에 단정돼서 북핵 문제가 더욱더 악화되는 이런 사태들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17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모습은 진정으로 민족의 생존권이라는 측면에서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초당적인 지혜를 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점을 새삼 느끼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나온 일련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단히 놀라운 결과를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만큼 북핵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도 해법에 대해서 대단히 지혜로운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 따르면 북핵 해법에 대해서 대북 특사를 파견하거나 남북정상회담 등 북한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견해가 74.7%에 달합니다. 반대로 경협 동결이나 경제 제재 등 북한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불과 22.8%에 불과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설득론이 68.8%로 압박론보다 두 배 이상이나 높습니다. 또 동아일보나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무려 87.8%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북한의 핵 개발의 저의가 대단히 위험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화해협력정책이 옳다는 것을 지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국민적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특히 대북 특사 파견이나 남북정상회담 등 설득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우선 2월 10일 외무성 성명 이후 국내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안정되어 있는 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남북 간에 적대적 감정이 많이 누그러지고 또 실질적으로 교류협력·화해협력사업이 진척된 데 따른 심리적 안정감도 많이 작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북의 핵 보유 성명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과 수준을 실감합니다.

○최성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초청한다면 방북할 의사가 있다, 단 특사로 가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는 이 의미는 저는 대단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저 개인적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특사로 북한에 파견 또는 방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한미 간의 공조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을 특사로 했을 경우 가져오는 남북관계 해법에 따른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초청 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방북하시겠다는 의중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도와서 이 문제를 성사시키고 도울 용의는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갈 수 있다면 평양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또 6·15정상회담을 이끌어냈던 전 대통령으로서 북한 핵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 안타까움과 고민 끝에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최성 위원 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북한 측 인사를 만났을 때 북핵 문제 해법과 6자회담 참여를 둘러싼 북한 지도부의 고민 중의 하나가 역시 여러 가지 북핵 일괄타결방안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해법을 찾는, 적극적인 해법을 찾는 노력의 와중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만약에 초청했을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북할 의사가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방북했을 경우 역시 김정일 위원장과 단독 대좌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평화롭게 푸는 데 대단히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중과 의사를 타진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북한 내의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의사를 타진하는 일련의 정보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구체적으로 공식 경로를 통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최성 위원님께서 작년 정기 국회 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북측

인사와의 접촉 내용을 설명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북측의 직책과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얘기였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합니다.

○최성 위원 최근에 북한이 북핵 보유 선언을 한 이후에 관영방송을 통해서는 '우리의 있지도 않은 핵과 미사일 위협설을 내둘리면서'라는 표현을 썼고 또 한성렬 유엔주재 대사는 '대화를 통한 해결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불변한다, 우리도 회담에 나갈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뉘앙스로 보면 조금만 명분을 마련해 주면 6자회담에 참여할 의사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 역시 기존의 외무성의 핵 보유 선언이 단순히 공식적 선언이라기보다는 6자회담의 참여를 위한 북한 나름대로의 협상용 타결로 보고 계시는 건지, 그런 의미에서 한성렬 유엔주재 대사의 최근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성명에서도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북이 원하는 것은 협상 상대로 인정받고 그래서 6자회담을 통해서 자신들의 핵 포기와 체제 안전, 경제 지원을 바꾸고자 하는, 거래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명백백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6자회담의 중단을 선언하면서도 그러나 회담 재개 조건과 명분이 갖추어진다면 언제라도 열릴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북측의 진심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최성 위원 북핵 문제의 주도적인 해결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해야 될 노력은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핵 보유 선언과는 직결되지는 않지만 남북장성급회담의 재개를 요청했던 부분들 그리고 장관급회담의 조건 없는 재개 등을 주장하셨는데 정부가 이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남북 간 대화 채널의 가동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조건 없는 남북장관급회담의 재개를 북측에 공식적으로 주장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습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더더욱 남북 간의 당국 간 대화 채널이 아쉽습니다. 남북 간에 대화가 되어야 이것이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남과 북 모두에게, 국제사회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입니다. 북은 북대로 자신들의 진의를, 하고 싶은 얘기를 남을 통해서도 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부족한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도 남쪽의 설명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국제사회도 북의 정확한 진의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이 문제를 외교적·평화적으로 푸는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남북대화가 정체되고 교착된 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서 가능한 한 빨리 남북 간 채널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 위원 추가적인 질의인데요. 북핵 문제와 연결해서 개성공단의 성공적인 추진 또 3대 경협사업의 성과적 추진들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 문제 등 산적한 남북 간에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북한 핵문제와 직결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조건 없는 남북장관급회담의 재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장관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북측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용의는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동안 누차에 걸쳐 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북도 지체 없이 남북 당국 간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북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텐데 남북대화는 또 그동안 쌓은 여러 가지 실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남과 북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것은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성 위원 바로 그런 장관님의 입장 천명이 최근 한성렬 주유엔대사도 부분적으로 인정했던 것처럼 북한 내에서 온건파의 입지, 또 북한 내에서 대화파의 입지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측면과 동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북한 내에서 강경파의 입지가 강화되지 않도록 남북 간의 대화채널이 유지되는 측면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최근의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악화된 강경노선의 상승작용이 북한 내의 강경파 입지를 강화시킴으로써 북핵 문제의 해결은 물론 남북대화의 개선에도 장애가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여러 가지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만 아직 정부 관계 당국으로서는 정확한 판단과 평가가 끝나지 않았습니

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는 지속되어야 하고 또 대화를 통한 해법 이외에 다른 해법은 우리 정부로서 찬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화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성 위원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구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다루기 힘든 협상 상대인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민족의 생존권적인 이익과 직결된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에 저는 통일부를 포함한 정부 당국자는 부분적인 사소한 실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남북화해협력정책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라는 너무도 정당한 길에 잘 나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들림 없이 정진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위원 먼저 북핵 보유 선언 이후에 핵 보유의 진위 여부 그리고 북의 진정한 의도,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해석도 갈리고 의견도 분분한 것 같습니다. 먼저 핵 보유의 진위 여부와 관련해서 정세현 직전 통일부장관께서는 최근 모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서 독자 정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북핵이 미국이 있다면 있는 것이고 없다면 없는 것이다, 있다고 생각한들 미국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앞질러 나가며, 없다고 생각한들 미국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반박하겠느냐' 이런 언급이 계셨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북의 외무성 성명이 나오고 나니까 '북이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인정을 해야지' 라고 하고 역시 일각에서는 '북이 있다면 있는 것이고 없다면 그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견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주 기초적인 사실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기서 진위 여부를 따지려는 게 아니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 특히 NSC의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독자적인 진위확인 능력 또는 채널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채널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우리 정부 관계당국의 정보 수집능력과 분석·판단 능력에 대해서 저는 신뢰합니다. 특히 정보 분석과 관련해서 한미 간의 정보 공유협력은 염려하시지 않아도 좋을 만큼 튼튼하고 또 긴밀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보유에 관한 추정은 지극히 과학적인 분석과 판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이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근거와 과학적 자료에 의해서 플루토늄의 추출량과 우라늄시설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이 이루어져 왔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관계당국이 면밀하게 죽 추정해 오고 또 평가가 끝난 것은 평가가 끝난 대로, 평가가 진행되는 것은 평가가 끝나는 대로 추가적인 정보를 계속 주시하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92년 이전에 추출한 플루토늄 10～14kg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었을 가능성에 대한 추정 그리고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8000개의 폐연료봉을 추출해서 만든 플루토늄 50t, 이것은 시간과 여러 가지 조건 또 그동안 포착된 정보로 봐서 아직 무기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 또 우라늄과 관련한 여타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 분석, 이런 것들은 다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 데이터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핵 보유와 관련해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외무성 성명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동안 과학적으로 접근해 온 북한 핵 보유 능력에 대한 판단을 변경시킬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원희룡 위원 기존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그런 말로 듣겠습니다.

북의 진정한 의도와 관련해서 이게 협상용인지 아니면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인지에 대해서 역시 관측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역시 이와 관련해서 묻고 싶은 것은 북의 의도에 대해서는 현재 보면 북한 외무성과 외무성 대변인 등등의 성명이 있고요. 현재 객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유엔 북측 대사와 한국 측의 유엔에 나가 있는 채널과의 대화, 또는 거기에서의 발언들 이런 것 이외에는 지금 중국의 입을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외무성 성명 이후에 북의 의도를 북측과 우리 한국 측이 직접 접촉해서 확인한 채널이 있습니까? 북의 의도에 대해서 3자를 통해서 또는 일방적인 성명을 통해서 이쪽에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측의 채널이 북측과 직접 만나서 북의 진정한 의도

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확인한 채널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종합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직접 들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유관국들과의 협의와 공조를 통해서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가 가진 모든 능력과 채널을 통해서 정확한 의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지금까지 내놓은 게 결국 6자회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유관국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위원 보도는 안 됐지만 최근에 북측 유엔대사와 우리 한국 측의 기존의 대화 채널이 대화를 나눈 일이 있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정보관계 상황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제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원희룡 위원 좋습니다.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 대화에 의하면 물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마는 북측의 입장은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공존을 거부하면서 정권교체를 계속 추구하고 있고 특히 폭정의 전초기지로 규정하면서 자유 확산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표현만 일부 바꿨을 뿐 기존의 적대정책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다 진전된 북과의 공존을 전제로 하는 협상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협상에 나갈 수 없다, 결국 미국이 북한을 앞서 가려고 하고 항복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담은,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보다 다른 틀과 다른 내용의 협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가 애써 협상용이라고 해석하는 근거라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정부로서는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동안 작년 11월 LA 연설을 필두로 해서 정상외교를 통해서 펼쳐 온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법에 관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 이 흐름 속에서 6자회담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 북을 협상 상대로 인정해 줄 것과 북의 지도자를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여러 채널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강력히 피력한 바 있고, 2002년 악의 축 발언과 비교하고 그동안 1기 부시정권에서의 대북정책 흐름 속에서 보면 나름대로 미국 행정부도 외교적 해법에 관한 여러 가지 의지 천명과 북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명백한 언명 그리고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용어는 있습니다마는 북한을 특정한 용어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정부로서도 나름대로 우리의 그같은 대미 설득 노력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원희룡 위원 외교부와 관련 라인들이 특히 1월 초 부시 취임을 전후해서 북을 직접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말 것, 악의 축 발언보다 톤 다운시켜 줄 것을 총력외교를 펼쳐서 반영시킨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는데, 현재 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일단 핵을 포기하면 이후에 놀랄 만한 미래가 있다는 것들인데 막상 이것을 관측하는 입장에서나 북의 입장에서는 핵 포기 시에 어떠한 체제보장이 있는 것인지, 즉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하면서 자유 확산을 지금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기조로 했는데 예컨대 핵만 포기하면 김정일 지도체제의 존재를 전제로 현재의 권위주의적이고 폭압적인 정권이 그대로 있더라도 일단은 평화공존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개혁·개방으로 나아간다는 것인지, 아니면 폭정의 전초기지로서 북한이 가장 앞장서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권력이 보다 분산되고 개방된 체제로 곧바로 이행해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중간단계도 인정하지 않고 미국의 자유 확산이라는 의미에서 읽혀지는, 예컨대 우리 한국이 현재 도달해 있는 고도의 자유인권사회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 공존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체제변형, 또 북한과 이야기하는 평화적 공존의 내용이 어떤 수준의 북의 체제변화를 전제로 한다고 이해하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부시 미국 대통령은 특정한 제도와 체제를 강요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은 북한의 몫입니다. 북한은 체제안전 보장, 즉 다른 말로 하면 불가침조약을 맺자고 주장해 왔고 공격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접점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북의 해석으로는 적대시 정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체제변형이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책이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정부로서는 어찌 됐건 체제안전 보장, 체제유지의 문제들은 모두 북한 핵문제의 포기와 관련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얘기가 있으면 나와서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지 회담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화하고 전제를 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관점입니다.

○원희룡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짧은 질의 두 가지를 할 테니까 예스, 노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료 50만t 지원이 요청되었는데 비료지원은 인도적 지원의 범위에 해당되는가 아닌가 짧게 예스, 노로 대답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작년 말 크리스마스 직전에 장관께서 중국을 방문하실 때 NSC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갔지 통일부장관이라는 자격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사후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정동영 비료지원은 그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해 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중국 특사로 간 것은 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장관으로서 간 것입니다. 다만 그쪽에서 NSC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특사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원희룡 위원 통일부장관이라는 명칭을 못 쓰도록……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론의 과장 보도입니다.

○원희룡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모두들 북핵문제가 더 풀기 어렵게 되어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위기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동의하면서도 저는 이럴 때 오히려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제로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북미 간의 입장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미국은 선 폐기, 후 체제보장이었고 북측은 선 체제보장 선언, 후 폐기였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여기에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2월 10일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로 지금 한·미·일은 6자회담 복귀를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빌리자면 선 복귀, 후 논의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은 그런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선 폐기든 선 보장이든 그 문제를……

○권영길 위원 지금까지는 선 폐기였는데 이제 그것은 차치하고 2월 10일에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는 우선 6자회담에 복귀하라 그리고 후 논의하자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습니다. 어쨌든 6자회담이 열려야 핵이든 체제든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권영길 위원 현 단계에서는 무조건적인 복귀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조차도 6자회담 폐기를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조건과 명분이 갖춰지면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고, 6자회담 참가국 전부가 3차까지 왔고 지금 4차가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영길 위원 북한은 6자회담 폐기를 선언한 것이 아니고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언 이후 미국과 우리, 일본은 적어도 지금 6자회담에 복귀하라고 하지만 북한은 조건이 채워지면 복귀하겠다고, 무기한 연기를 취소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 변화를 위한 것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제시 없이 미국과 우리나라는 함께 무슨 말이냐, 먼저 복귀하라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정리하자면 선 복귀다 후 논의하자……

○통일부장관 정동영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북한조차도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인정을 합니다.

6자회담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중국에 고위 사절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돕는 여건 조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의 판단입니다.

○권영길 위원 지금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 상

식적으로 그렇거든요. 어쨌든 북한이 2월 10일에 핵보유 선언하고 그다음에 6자회담에 대한 무기한 참여 보류를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 위협이 현 상황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체제보장을 약속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이 있어야 북한의 입장이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것 없이는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 안 하는데 그것을 제시하지 않고 6자회담에 참여하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무조건적인 6자회담 참여 복귀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6자회담에 조건을 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올 한 해가 다 갈 것입니다. 일단은 6자회담에 응하는 것이 빠른 해법이고, 다만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유관국이 노력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권영길 위원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위기의 조성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끊임없는 논쟁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중단을 하도록 하고 차후에 계속하겠습니다.

분위기 조성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경협의 활성과 인도적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오늘 아까 어느 위원의 답변에서도 남북관계가 위기적 상황에 있을 때마다 남북경협이 절대적 기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원희룡 위원의 비료지원은 인도적이냐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당연히 인도적일 것입니다. 장관께서도 인도적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권영길 위원 식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권영길 위원 그것은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될는지 혹은 최소치가 될는지 혹은 우리의 성의를 표시하는 양이 될는지 모르지만 식량과 비료를 지원해야만 적어도 굶어죽는 북한주민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없겠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권영길 위원 그러면 처음에 제가 물었던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하겠다는, 지금은 무기한 참여 보류인데 지금의 입장이 계속되어도 인도적 지원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북한도 협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적 지원이지만 거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국민적 동의 또는 합의가 따라붙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도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6자회담에 참여하게 되면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권영길 위원 아까 2월 10일 선언 이후에 6자회담에 관한 부분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귀시점이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6자회담과 관계없이 비료지원은 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구체적으로 4월입니다. 그런데 저는 4월이 다 가도 2월 10일 선언을 둘러싼 이 문제가 가닥을 잡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비료지원을 위한 협상을 우리는 할 용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리고 그것이 전개되면 비료지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권영길 위원 오늘 장관께서 대북 인도 지원은 지속하되 비료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국민정서, 여론, 남북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은 6자회담과는 연계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정부로서는 인도적 지원을 6자와 연계시키지는 않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러니까 6자회담과 관계없이 비료지원은 하겠다, 다만 그것을 위한 남북 간 협상이라든지 실무적인 협상은 필요로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권영길 위원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작년에 비료지원은 얼마나 했지요? 봄에 20만t, 가을에 10만t 해서 30만t 했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권영길 위원 올해 북한은 20만t 추가해서 50만t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난해 수준인 30만t은 지원하겠다고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

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구체적인 것은 정부에 여백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저는 적어도 50만t에 대한 부분은 국민적 정서는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 없이 적어도 지난해에 한 수준 30만t은 계속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장관께서 아까 말씀하신 남북관계가 정말 어려워져도 그것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99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적게는 15만t에서 많게는 30만t까지 모두 155만t의 비료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당국 간 협의를 거쳐서 그리고 국회의 보고 절차 등의 내부절차를 거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일방적인 지원사례는 없습니다.

○권영길 위원 저도 일방적 지원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6자회담과 연계 없이 비료지원은 하겠다고 장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당국 간 대화가 되면 그 테이블에서 협의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50만t을 공급하더라도 인도적 지원이 충족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마 장관께서도 보았을 것이고 보고를 받았겠지만 제럴드 버크 WFP 공보관이 와서 북한의 인도적 삶을 위한 필요 식량량을 650만t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영양기준 충족을 위한 필요 식량량이 540만t인데 이번에 우리가 비료 30만t을 추가 지원하더라도 식량을 수확할 수 있는 예상량은 510만t이니까 최소한의 영양기준도 채워 주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면 작년의 30만t에 20만t을 추가해서 50만t을 지원하는 것이 맞고, 그 20만t을 추가하는 것은 2월 10일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 정서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더라도 지난해에 지원했던 30만t 규모는 지금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2월 10일 선언 이후에 위기적 상황으로 치닫고 가는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에는 지난해 수준은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을 밝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동안 당국 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료지원 된 사례는 없다는 점을 유의하겠습니다.

○권영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실 것이라고 보고 묻습니다.

우리 외교부 차관보가 갔기는 하지만 정부의 입장을 갖고 갔을 것입니다. 송민순 대표가 북경에 갔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겠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권영길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무조건적인 6자회담의 복귀에서 변형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아까 분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중국 측에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저도 내용을 보고받기는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미 국회에서도 제기되고 또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되어서 잘 정리된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중국 측에 설명했습니다.

○권영길 위원 마지막 하나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드렸던 미국의 선 폐기 후 보장, 북의 선 보장 후 폐기, 이 부분이 평행선인데 저는 적어도 우리 정부라면 6자회담이 정말 열려서 본격화되면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마련해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복안이 있다는 것을 북에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전달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질의가 난해해서 제가 말씀을 듣다가 잊어버렸습니다.

○권영길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선 핵폐기·후 체제보장입니다. 북은 선 체제보장·후 핵폐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맞서 있다기보다는 '협상 상대로 인정해라. 그러면 나가서 얘기한다' 이것으로 이해합니다.

○권영길 위원 실제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이 평행선에서 이것을 당길 수 있는 우리

정부의 복안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미 간의 대립적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떤 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이번에 왕자루이를 통해서 북에 전달되는 것이냐 하는 질의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것은 너무 나간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북도 한국정부가 남쪽에서 노력해 온 평화적 해법의 혈로를 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하고 남쪽에서 느끼고 있는 실망감에 대해서 그 깊이도 헤아려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6자회담이 열렸을 때 내용과 해법과 안에 대해서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6자회담을 무기 중단을 함으로써 오게 되는 북한의 고립화와 불이익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북한의 전략적 결단에 의해서 6자회담이 재개되는 쪽으로 유관국들이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권영길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얼굴을 붉힐 일이 있으면 붉히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얼굴을 붉혀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기가 오면 붉혀야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장관께서 국회에서 대정부질문할 때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강하게 느낀 것부터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난 7년간 햇볕정책을 추진해 왔고 또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햇볕이든 화해협력이든 그것은 정책수단이고 우리가 목표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이고,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고, 그다음이 북한의 점진적인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으로 개혁·개방이고 정치적으로는 인권개선입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마는 적어도 방향이 그쪽으로 변할 것을 우리가 희망하고 기대하면서 화해협력과 햇볕정책을 7년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 그 세 가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북한의 핵을 막으려고 했는데 사실상 핵을 갖게 되었고, 한반도는 평화가 정착되는 방향보다는 평화가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북한은 좀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등장하는 것보다는 자꾸 뒤로 물러서면서 더 폐쇄성을 강화하는, 세계 여론과 세계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그동안의 경과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다보니까 상대가 있는 문제니까 쉽지 않은 면이 있어서 이러저러해서 안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 대신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대처하겠다는 설득력 있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 있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핵보유에 대한 선언이냐 주장이냐 이런 식의 논란이 너무 많은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혹스럽고 불만스러운 얘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7년간 해 온 정책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에 대한 설명과 그것에 대한 앞으로 정책방향을 재조정해 보겠다든가 또는 그동안 기본적으로 잘 해 왔는데 이러저러해서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다. 핵이 있어도 주가에 변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불안을 느끼는 국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성어린 설득력 있는 대응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가 최근의 북핵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괴로웠던 것은 우리 스스로의 초라한 모습을 확실하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어 가는구나, 우리가 한반도의 당사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보다는 상당히 주변국으로 밀려나는구나 하는 것을 상당히 강하게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민족공조냐,

한미공조냐, 한미동맹이냐 하는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민족공조도 필요하고 한미동맹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미공조에 여러 가지 균열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고, 보도도 있었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기대했던 것은 민족공조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 결과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어요. 민족공조도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안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류협력을 하고,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노력한 것은 그래도 민족공조 부분에서는 뭔가 진전이 있어서 적어도 북한이 민족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설득력과 우리의 영향력은 키워 오지 않았나 하는 기대였는데 이번에 일련의 사태를 보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도 부족하고 북한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또 북한과 나름대로 대화의 채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고, 북한의 핵심적인 결정은 다른 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모르면서 희망적인 이야기만 국민들한테 해 왔다면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비료를 주냐 안 주냐 이런 이슈 이전에 저는 우리가 북한으로 하여금 민족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고 민족 이익에 충실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우리의 설득력이나 우리의 영향력을 어떻게 키워왔는가, 과연 그동안 우리가 영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했느냐 아니면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했느냐, 또 우리가 북한을 이 과정 속에서 좀더 많이 알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올바른 공조의 길을 찾아왔느냐, 아니면 우리 혼자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민족공조만 이야기했지 실제로는 민족공조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참담한 문제인식을 느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민족공조를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 북한하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대화도 해야 되고 정보교류도 해야 할텐데 지금은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박세일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좋은 고언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핵문제는 남북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문제이고 또 동북아 지역문제입니다. 이런 중첩된 환경 속에서 한반도문제의 당사자로서 한국이 지렛대 역할을, 또 한국이 이 문제에서 구체적 행위자로서 역할하기 위해서 그동안 고심하고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7년간 화해협력정책을 해 온 것이 벽에 부딪쳤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남북문제를 풀고 핵문제를 푸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우리 국민들도 잘 이해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의 과정에 있고, 그 과정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지금 이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말하는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정부로서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방향을 틀 것이 아니라 그 방향에 대해서 점검하고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그러나 상황전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중심은 확고하되 상황을 좀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때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 특단의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답답한 심정에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특단의 대책이 잘 없는 것이 또 남북관계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꾸준히 지금까지 해 온 노력의 연장 속에서 해법을 모색하고, 결국은 대화에 의한 설득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정부로서는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의 채널들을 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여 가겠습니다. 그래서 남북대화의 복원 그리고 6자회담의 재개 등 국민적 기대가 어느 날 충족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일 위원 시간이 다 되었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참담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는 북을 상당히 애지중지 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할 때 제가 느끼는 것은 북의 남한에 대한 태도는 그렇게 애지중지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볍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책임자로서 힘이 드실 텐데 저는 사실을 정확하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명분은 있고 그럴 듯하지만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앞으로 납북자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6·25전쟁으로 인해서 민간인 납북자 약 8만여 명, 국군포로 5만여 명, 북한에 생존이 추정되는 538명 중에서 47명만 귀환되어 있습니다. 또 6·25 이후에 납북된 민간인이 486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커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고 침묵으로 대응해 왔는데 이분들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앞으로 국내외적으로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가 주무부처로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황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소재파악부터 시작해서 좀더 단호하고 적극적인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분들의 생사확인이라든가 소재파악, 귀환 등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통일부 안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사태가 올 것이고, 이 문제는 앞으로 갈수록 계속 커질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석 위원 임종석 위원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이 참 복잡한 함수입니다. 남북관계, 외교안보 또 주변국들이 다 관련되어 있는 참 풀기 어려운 함수 같습니다. 또 그런 만큼 지금이 아주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 하시면서 NSC 상임위원장을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지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중요하게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본회의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핵보유 선언과 핵보유 주장을 굳이 나누어서 이야기한 것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이것을 말장난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핵보유 선언이라는 것은 개념화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종합적인 핵무기 능력을 갖추고 핵실험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선언했을 때 우리가 쓰는 개념화된 표현입니다. 만약 북한이 그 단계에 이르러 있다고 한다면 국제사회 대응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화된 표현을 피해서 현재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찾으려고 했던 장관의 답변이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일부 언론에서 핵보유 선언이라는 표현을 남발하고 있어서 당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이것을 수도 없이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의 외무성 성명이 대체로 주변국들로부터나 전문가들로부터 협상력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이번 조치는 현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결과를 당장 얻어낼 수 없으면서 환경을 악화시키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핵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은 핵을 폐기하고 사찰을 받겠다고 이미 자신들의 카드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체제안전 문제, 에너지문제를 포함한 경제적 지원 문제에 대한 구체적 카드를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한 북한의 주장은 일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합니다. 만약 북한이 이것을 끌어내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저는 이번 조치가 섬세하지도 못하고 상황을 종합적으로도 보고 있지도 못한 어리석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카드를 현시점에서 얻어낼 수 없으면서도 동시에 주변 환경은 악화시키고, 국제여론도 악화시키고, 특히 이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화해협력정책을 지속해 온 우리 한국의 정부와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원인 분석과 처방은 일관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국내정치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어떤 여론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핵문제는 장관께서도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셨듯이 북핵문제 본연의 문제해결의 측면

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핵문제 해결 측면에서 보면 앞서 존경하는 원희룡 위원님께서도 미국의 궁극적인 의도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아까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핵 폐기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현시점에서 핵 폐기가 목적이고 그것을 전제로 우리가 한반도 화해협력과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국제사회로 나오게 하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전제가 핵 폐기라면 북은 현재 핵을 폐기할 것이고 국제사회로부터 사찰을 받겠다는 자신들의 카드를 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사찰을 받아서 핵을 투명하게, 즉 한반도비핵화에 완전히 동의하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국제사회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체제안전 문제나 또 에너지 문제를 포함한 경제적 지원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한 북한의 주장은 정당합니다. 이것이 없는 한 6자회담은 열려도 공전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6자회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남북대화도 직접 해야 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강조해 왔던 단계적 해법을 통해서 일단 동결하면 보상을 시작하고 궁극적 폐기를 해 가는 과정에 포괄적 협상을 하는 이런 단계적 협상안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전면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인을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한 현재 상황관리적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이 완전히 정당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고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섞어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현시점에서 외무성 성명 이후에 남북경협이나 대북 경제지원 문제에 대해서 재고하거나 연계시켜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저는 문제해결도 안 될뿐더러 이건 이미 우리가 과거에 겪은 바가 있습니다. 완전히 대화상대에서 배제되면서 부담은 나중에 전부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겪어 본 바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도 안 되면서 상황관리 능력을 잃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상황관리를 잘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밝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성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여론이 7 대 3 이상으로 갈립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주제가 그렇게 갈리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미 그간에 햇볕정책으로 이름 지어진 화해협력정책 또 평화번영정책이 성과를 충분히 내고 있고 더 가속을 해야 될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이 저는 국민적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관리적 측면에서 저는 화해협력정책을 병행하고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과 이것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지 않은 그간의 정부정책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것이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저는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비료 문제는 이것과 섞어서 다룰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면 그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북에 대해서 압박하는 것을 카드로 쓸 수 있으려면 분명히 중국과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북한의 대외무역 또 북으로 가는 경제적 지원의 70% 이상은 중국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밝히고 있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면 훨씬 그 비율은 높을 것입니다. 중국 쪽의 대문을 활짝 열어 놓고 우리가 이 상황을 안정되게 관리하고 남북 화해협력을 위해서 열어 놓고 있는 쪽문을 닫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해결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수천억을 남북협력기금으로 두고 남북화해협력 정책기조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보태면 북이 비료지원을 추가로 요청한 것도 어느 측면에서는 발전입니다. 그런 예들이 많지 않습니다. 중국으로부터 그렇게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도 북이 직접적으로 도와달라고 언급하는 것도 그리 흔한 예가 아니라고 제가 중국에 가서 여러 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관리 측면과 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가는 문제가 혼선이 일어나서 우리가 문제해결도 어렵게 되고 더 심각하게는 상

황관리가 어려워지는 이러한 정책혼선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특히 비료 문제와 대화협상을 지속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장관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정책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 때문에 제때 추진되어야 할 일들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또 진행되어야 할 일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면,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정책의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도 이 상황과 관련해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호응해 오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남북 화해협력정책으로 그동안 이루어 낸 성과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한반도에 이 같은 유동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마는 남북 간 대화가 지금 끊어진 지 8개월째 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리로서도 안타깝습니다마는 북으로서도 득이 될 것이 없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임종석 위원 한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칙적인 선에서 말씀하셔야 될 충분한 이유도 제가 느끼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통일부와 외교부 사이에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정부 내에 또는 청와대 내에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우려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대북 경협을 병행하거나 또 인도적 지원을 하는 데 당연히 남북 간 당국자 대화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막혀 있는 전면적인 남북 당국자 간 대화 개선이라거나 이런 문제를 전제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것은 구분된 문제로 우리가 추진해 온 만큼 그것을 좀 지혜롭게 한다면 저는 충분히 장관님께서 얘기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신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임종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 최근 북한의 핵 보유 선언과 6자회담 불참 선언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NSC 상임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는 이 부분을 보고드리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김문수 위원 언제 언제 보고를 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거의 매일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직접 대면보고를 매일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문수 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비공개라서 밝힐 수 없는 것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자는 것을 떠나서 정부의 대응, 특히 대통령께서는 국방·외교·통일 분야에는 직접적인 책임자가 아니시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일부장관 정동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러니까 드러난 것이…… 대통령께서 활동하시는 것은 언론에 다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속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일단 볼 때에는, 어떻게 어떻게 보고를 드려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조금……

○통일부장관 정동영 저도 여러 차례 대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현안 아니겠습니까? 매일 매일 챙기고 계십니다. 보고도 받고 있고 지침도 주시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통상 같으면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공개가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요. 장관님께서 NSC 상임위원장으로서 보고하시는 것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기회에 국민들한테 안심도 시킬 겸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사태 발생 당일 오후에 열린 NSC 긴급상임위원회 결과는 곧바로 안보보좌관에 의해서 대통령께, 당시에는 어디 지방에 계셨습니다마는 보고가 되었고 그리고 그 뒤에 매일 매일 보고가 됩니다마는 특히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면밀히 대처하라는 지침과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NSC 상임위원장으로서 저도 보고를 드렸고 안보보좌관이나 NSC 사무차장이나 또 외교부장관 등 보고가 있었고 안보관계 장관회의도 있었고

거의 매일 대면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김문수 위원 장관님께서는 대통령께 직접 대면보고한 게 언제 언제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글쎄요, 일시·장소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직접 대면보고를 드렸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위원 밝힐 수는 없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밝히고 안 밝히고가 그렇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 같으면 몇 시에 몇 분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보고했다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까지 관례에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위원 대통령께서 그러면 NSC 회의 소집을 직접 하시거나 주재하시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그것은 확대된 NSC 멤버들이 참석합니다마는 그날은 마침 국무총리께서 국회 답변 중이어서 사실상 NSC 상임위원회 멤버가 그대로 대통령을 모시고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하고 북핵 상황 전반에 관한 평가와 앞으로 대처방안에 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것이 1회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안보관계 장관회의는 한 번 있었습니다.

○김문수 위원 언제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안보관계 장관회의는 2월 16일이고 NSC 상임위원회는 2월 10일과 2월 16일에 있었습니다.

○김문수 위원 2월 10일 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물론 여러 가지로 상황이 그렇게 악화 안 된 것은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우리의 대응이 안이하고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애써 자꾸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많은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자료 8쪽에 보면 대화 통로를 유지하는 것과 경협 그리고 인도적 지원, 각종 민간행사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남북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대화 통로는, NSC하고 북하고의 핫라인은 있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위원회에서 확인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북 간의 채널은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다른 비밀을 알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했지만 장관께서 3일 전쯤에 발표한 것하고 북한 외무성이 하는 것하고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장관께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신 것이나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하신 것이나 공개적으로 된 것하고 북한이 돌아가는 행보가 너무나 배치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명백한 것은 북한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남측에 통보하고 한 전례는 없습니다.

○김문수 위원 통보는 아니지만 서로 교감 정도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느끼는 것이 우리는 자꾸 주는데 서로 어느 정도 교감은 되어야지,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전혀 불통이다, 이것은 굉장히 불안한 요소라고……

○통일부장관 정동영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교감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기대치입니다.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문수 위원 이것은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10분씩 해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대화 통로가 있는지 경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개성공단이다, 금강산이다, 교역은 어떻게 된다, 인도적 지원 부분은 어떻다, 민간 행사는 어떤 게 있다,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망라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바로 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북핵문제와 6자회담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기존의 정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또는 검토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 가능성이나 정부가 검토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별도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글쎄요. 남북관계 속에는 민감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런 것은 빼셔도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국회에,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보셔서 보고해 주시는 것이……

○통일부장관 정동영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심화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하거든요.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인도적으로 지원하면 북쪽에서도 인도적으로 우리한테 대응해야 되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국군포로 송환이라고 봅니다. 국방부장관은 미귀환 국군포로가 542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납북자 중에서 미송환된 사람이 486명이거든요. 국군포로와 납북자 미송환자만 합치더라도 1028명이거든요. 정부 통계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단 1명도 오지 않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지금까지 귀국한……

○김문수 위원 자기 발로 오는 것 외에 정부의 대화통로를 통해서는 한 사람도 돌려받고 있지 못하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2000년 6·15 정상회담 이전에는 사실상 이 문제를 얘기할 통로조차 없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작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진전돼 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결국은 아직 1명도, 사실 시인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시인도 안 하고 납북자가 있다, 국군포로 중에 본인이 원하는데 안 돌려보내는 사람이 있다 또 우리 정부는 달라…… 의제 자체가 정식으로 상정되고 있지 못한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국군포로 문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협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문수 위원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인도적인 대응이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질의인데 어렵게 답변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김문수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시면 그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도 났습니다마는 87년에 납북된 동진호 선원 임국재 씨, 기사는 보셨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김문수 위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일단 송환요구를 북측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하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말씀하신 대로 임국재 씨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경위 파악과 함께 송환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리고 국군포로 한만택 씨도, 외교부 일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마는 이미 북한에 도로 강제 북송되었기 때문에 북측 당국에 이런 사람들…… 거기까지 나왔는데 도로 잡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의 뜻에도 반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한만택 씨 건이나 김동식 씨…… 김동식 목사 납북된 것 아시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김문수 위원 그런 분들 송환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가 요청 못 할 건 없는 것 아닙니까? 장관께서 요청하실 계획 없으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맞습니다.

특히 국군포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라는 점에서도 이들의 송환은 국가의 책무이고 최우선 과제입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고 외교적으로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리고 개성공단에 대해서 경협 부분이 차질 없이 잘 되고 있다고 두 번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기초인프라가 잘 안 되는 것, 전기 아직 안 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김문수 위원 또 지하수를 파고 있지만 물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특히 통신 부분에서 전화요금이 분당 50센트로 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50센트 미만 되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러면 한 500원꼴 됩니다. 굉장히 비싸지요? 국내요금에 비하면 너무 비싸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국내와 비교하면 그렇지요.

○김문수 위원 그러니까 KT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더 낮추어야 안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전화요금 관련해서 담당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조명균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통신요금과 관련해서는 분당 50센트 이내로 된 상황에서 북측하고 구체적인 요금을 협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10센

트 정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국내요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마는 현재 통신수요를 감안할 때 운영비용 감안할 때는 그 정도 비용이 적정한 것으로……

○김문수 위원 중국은 한 통화에 얼마지요?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조명균 분당 80센트 정도입니다.

○김문수 위원 중국까지 분당 80센트입니까?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조명균 예, 입주기업들도 대략 그 정도 수준이면 감당할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전기는 언제 됩니까?

거기 있는 기업체 중에서 리빙아트는 자체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래도 100% 가동이 안 되고 한 60～70%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전기가 문제 아닙니까?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조명균 예.

○김문수 위원 또 하나 SJ테크는 아직 전기 때문에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안 되고 있지요?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조명균 예.

○김문수 위원 기공식도 하고 공장가동식을 했지만 사실 가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해당기업의 피해가 클 것 아닙니까?

○통일부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조명균 전력은 보고드린 대로 공사가 현재 5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일정상 3월 5일경이면 전력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용수나 기초적인 인프라, 정부에서 해야 될 이런 것들도 안 해 놓고……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내용이 없이 가시적인 성과 위주로, 홍보성 위주로 하기보다는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협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점을 장관께서 특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하려고 갔다가 피해 보는 사람들은 많아지면 경협에 지장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전기·통신 공급협상이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기업들에 불편을 주었습니다만 그래서 시범단지를 해 보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본단지 때는 기업들이 그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啓東 委員 2월 10일에 북한은 핵보유 선언을 했는데 우리 정부의 대처는 지극히 안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도 94년도의 1차 북핵 위기와 2차 북핵 위기는 양상과 내용 면에서 많이 달라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93년 3월 12일 북한은 유엔안보리에서 NPT 탈퇴를 공식적으로 통보했고, 그해 11월 유엔총회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진행된 내용으로 보면 박천이라든가 영변이라든가 평산 등지의 핵시설이 우려되는 시설들에 대한 직접적 폭격을 의미하는 분위기까지 갔었습니다. 그것이 1차 북핵 위기였는데요. 미국 정부는 작전 5027에 의해서 의심스러운 핵시설들을 직접 폭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차 북핵 위기는 잘 넘겼는데, 현재 1차 북핵 위기와 지난 2월 10일의 2차 북핵 위기는 그 성격과 내용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인식하기로는 당시에는 글로벌 이슈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중동의 이라크나 이란 같은 문제들을, 중동지역에서의 미국의 패권적 문제를 글로벌 이슈로 생각하고 북핵 문제는 6자회담 정도에 넘겨놓는 리즈널 이슈(regional issue)로 하향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떤 점에서 안심하고 스스로 냉각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두 번째 변화된 입장은 리즈널 이슈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의 일상적인 벼랑 끝 전술에 대해서 미국도 이제 역 벼랑 끝 전술을 쓴다는 겁니다. 해 볼 테면 해 보라는 거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국제사회 공조화나 설득력을 얻는다면 다시 경제적 압력과 더불어서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기가 많지 않습니다.

즉 중동의 이라크 같은 경우에서도 51%의 국민들이 참여하고 이라크 주민들에 의해서 정통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정말 민주화되지 못한 유일체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트렌스퍼메이션도 국제적으로 긍정적 지위를 얻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 핵 위기 때와는 달리 북쪽을 직접적으로 무력 제재한다고 해서 국제적인 동의가 부족하지 않다 이렇

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2차 핵 위기의 문제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년 이내에는 북핵 위기를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내적 역량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역량을 갖추는 것은 바로 리비아식 해법에 있어서는 영국이 그런 역할을 해 왔고 그런데 남북관계에서는 중국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민족적 문제인 남쪽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현재 하는 모양새로 보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주무부서인 통일부에서는 정보에 있어서도 매우 어둡고, 그런 기능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확보하지 못했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정보의 독점과 한미 간의 협력관계에서도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우리 국민의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이런 모양을 바라보면서 지난 2월 4일 정동영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외무장관회담이 14일 개최되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얘기하면 버벌 어그리먼트(verbal agreement) 이를 테면 라이스 외무부장관이 처음으로 가지는 외무부장관 회담인데 그것을 통일부장관이 혼자 이틀이나 앞서서 미리 발표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미국 측은 외무장관회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본국의 라이스 장관한테 보고하기 이전에 발표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협조해야 될 장관이 외교적 버벌 어그리먼트도 어기고 먼저 기자간담회에서 불쑥 발표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아나운서 출신의 장관이 아직도 마치 특종을 보도하듯이 기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인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수는 인정합니다. 제가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가 2월 3일 돌아오고 그다음 날 아침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고서에서 보고 또 외교부에서 설명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6자회담 재개를 통해 주변 각국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도 열리고 하는 배경 설명을 여러 가지 설명 중에 곁들였습니다마는 그것이 엠바고가 걸려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미처 유념하지 못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저의 실수입니다마는 뒤에 외교경로를 통해서 유감을 표시했고, 이것이 고의가 아니라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적하신 것은 유념하겠습니다.

○朴啓東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뭐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인용하라고 했습니까? 제 질의 중에서 무슨 내용이 사실관계하고 달랐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이것을 제가 무슨 다른 이유로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사실관계는 이렇게 됐다고 설명한 겁니다.

○朴啓東 委員 제가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발표라는 말이……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러니까요. 제가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인데요. 그것을 무슨 의도를 가지고 발표를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朴啓東 委員 그러면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얘기에 엠바고가 걸린 줄 모르고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어떻게 위원이 질의하는데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해 보지 못하고 마치 질의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답변하는 장관은, 나 국회의원하고 처음 봐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위원은 항상 그렇게 소리 질러도 되는 겁니까?

○朴啓東 委員 아니, 왜 사실관계를 묻는데 근거 없이 의도성까지를 파악해 가지고 인식하고, 국회의원보고 '사실관계나 제대로 알고 얘기하라' 그런 장관의 고압적인 자세가 어디 있어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제대로 알고 말씀하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고 설명을 드린 것이지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니, 사실관계라면……

○朴啓東 委員 진행되어지는, 워딩은 그대로고 그러나 그 의도는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옳은 일이지, 제가 어디 사실관계와 다른 말씀을 드렸다고…… 제가 발표라고 했어요, 기자간담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지…… 좀 어려운 경지에 몰리면 금방 남의 말 물고 늘어지듯이 그렇게 나와 가지고 되겠어요, 장관님께서?

○통일부장관 정동영 아니, 위원님께서는 장관의 태도를 인격적으로 모욕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좋고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겁니까?

○朴啓東 委員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앞에

속기록을 전부 보세요. 제가 어디 의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 답변하는 장관의 자세나 태도에 있어서 이전에 없던 그런 태도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위원이 질의하는데 자신이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둥 그렇게 얘기합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답변하기 곤란한 것이 아니라 제가 실수를 인정하면서 '사실관계는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문수 위원 위원장이 주의를 주세요.

○朴啓東 委員 위원장이 한 번 정식으로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정리를 하시지요.

○朴啓東 委員 3분만 더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직 내용적 질의를 제대로 못 해서요.

○위원장대리 유선호 정리하시지요.

○朴啓東 委員 아니에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정말 오늘의 이 시기는 그야말로 핵심적으로 남북관계에 어려운 위기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올 수 있다는 측면, 그래서 실질적인 협상루트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최근까지 통일부에서, 남북관계를 주관하는 부처에서 북측의 대화가 가능한 라인으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최근에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 북쪽의 어느 직책에 있는 사람과 이런 대화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북측의 어떤 직책에 있는 누구와 우리의 누가 어떻게 접촉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朴啓東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전략과 여러 가지 심도 있는 통일의 논의도 이제 참여정부에서는 국민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에 송영배 차관이나 대북협상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경험과 이런 것들을 잘 같이 공유해야지 대북 논의라든지 남북관계 논의를 정부가 독점하고 그것을 마치 기밀화하는 것이, 정말 오늘의 안일과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열린우리당의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소 이런 점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핵문제만큼은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민주화와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쌀 지원이나 이런 인도적 관계에 있어서는 인도적 접근이 필요한데 지금 핵문제에 대해서는 무발언·무비판으로 진행되고 있고 인권문제나 민주화문제는 정말 나 몰라라 하고 입 다물고 있고, 그런 관계가 결국은 앞으로 미래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데에도 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 장관께서 정말로 앞으로도, 이번에 힐 대사가 얘기했듯이 계속 속도조절과 조율이 필요한데 그리고 개성공단의 경협문제라든지 비료 지원에 대해서 같이 대북제재를 지금 가해야 된다고 미국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든지 지속적 지원이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지원문제가 전략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끊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입장을 강공으로 몰아가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한미공조에 대한 의심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아까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께서 얘기할 때는 대북지원에 대해서 문제없이 지원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또 오늘 이 보고서에 보면 '대북지원 관계도 조절을 봐 가면서 하겠다' 이게 현안보고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현안보고에서는 앞으로 속도를 봐 가면서 하겠다고 해 놓고, 또 제일 뒤에 나와 있지요.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되 비료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와 여론, 남북 당국 간의 협의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또 권영길 위원이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이것 계속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니까 '그것 계속 될 겁니다' 보고서를 믿어야 됩니까, 장관의 답변을 믿어야 됩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朴啓東 委員 말씀하십시오.

○통일부장관 정동영 들으셨겠습니다만 권영길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6자회담과 연계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6자회담과 기본적으로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55만t의 비료가 가면서 늘 6년 동안에 걸쳐서 당국 간 협의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당국 간 협의테이블 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거와 여기 보

고자료 부분과 그렇게 상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아까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무발언·무비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강력한 유감도 표명했고 이것이 분명히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위배된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하면서 북한이 국제적 고립화와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朴啓東 委員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고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NSC위원장이 하시는 말씀은 국가 안보와 위기에 대해서 최종적이어야 되고 가장 신중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2월 10일 북한이 6자회담을 당분간 연기한다고 하고 그야말로 핵을 보유했다고 선언하는 마당에 우리 NSC위원장이 2월 7일 KBS 인터뷰에서 마치 6자회담이 임박한 것 마냥 비쳐지는 것, 이 대한민국의 NSC위원장이 얼마나 신중하지 못한 자세였는가를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언급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선택과 결단이 임박했다는 것이 전체 문맥에서 제가 전달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6자회담의 재개시기를 그 시점에서 예단할 수 있었겠습니까? 러시아 외무장관도, 백악관 대변인도, 일본도, 중국도, 모두가 6자회담 조속재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표명하는 시기였습니다. 모두가 그런 인식을 공유한 바탕 위에서 우리도 원칙적인 입장을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작은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아까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사실관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기자출신 장관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국회의원 중에 기자 출신도 있고 아나운서 출신도 있습니다. 박성범 위원님 같은 분은 기자출신 의원님이십니다. 저는 기자를 18년 하다가 국회의원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부분 사실관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啓東 委員 기자 출신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면 서로 과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한테 우리가 정책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알게 해 드리는 것에 대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나 장관께서 좀더 지혜를 발휘해서 이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최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최성 위원님, 일단 10분간 쉬고 시작할 때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2시간 반을 계속했기 때문에 잠깐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선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2월 10일 북한 외무성의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선언과 핵무기 개발 선언으로 인해서 사실상 통일부가 행정부 중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부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정동영 장관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통일부보다 더 곤혹스러운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그리고 전 세계의 시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인 대화·협력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일단 먼저 밝히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외무성이 방금 이야기했던 그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선언이라기보다는 주장이라고 통일부장관께서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무성은 그야말로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분석하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인데 만일 외무성이 아니고 북한의 인민군 차원의 명의로써 똑같은 내용의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일 그러한 선언을 할 경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생각입니까? 간단간단하게 단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선언과 주장의 차이의 핵

심은 정부가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것인데 정부는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클리어 스테이트(nuclear state)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의 이야기입니다.

○이성권 위원 그다음으로 만일 북한이 이런 선언의 차원을 떠나서 실제 핵 재처리시설을 재가동할 경우, 아니면 실제 핵탄두를 탑재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가능성을 두고서 미사일발사 실험을 했을 경우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실 생각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 같은 경우는 추가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처가 되겠습니다마는 추가 악화된 상황을 가정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책을 강구하겠노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로서 신중한 처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성권 위원 그러면 북한이 핵실험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핵개발로 인해서 만든 핵물질을 해외에 수출할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이십니까? 가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지금 말씀하시는 핵실험을 했다든지 핵물질을 확산했다는 등의 이른바 최악의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책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악화된 상황을 가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성권 위원 저는 오히려 그 점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찬성을 하고 있지만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민족공조라든지 우리 민족끼리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은 타당하지만 북한 핵문제만큼은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의 핵문제는 북한당국이 실제 민족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핵 게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임이라면 결국은 난타전도 있을 수 있고 그야말로 상대가 어떻게 노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처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밝힘으로 인해서 상대가 그런 수준을 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이중적인 모순관계라고 말을 하는데 같은 민족이라는 측면과 군사적인 대치관계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북한은 핵 게임을 하면서 링 위에 올라와 있는 복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로서 미국이 될 때도 있고 일본이 될 때도 있고 한국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핵 게임에 있어서는 민족적 관점에서 대화와 설득, 화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핵 게임에 있어서는 한국정부도 북한이 나오는 대응방안에 따른 시나리오를 가져야 되고 그것을 공표해서 일정 정도의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흔히 권총을 가지고 사람을 겨냥하고 있을 때가 가장 공포감이 높아집니다. 실제 쏘아졌을 때는 맞든 빗나가든간에 그것은 공포의 위기로부터 다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북한에 어떤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밝힘으로 인해서 북한의 태도나 행동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지금 북한 핵문제는 위기상황이 된 지 12년째 되었고 그 뿌리로부터 하면 15년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어떻게 하면 북한 핵 위기가 직접적으로 남한에 정치·경제·사회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가 하는 측면과 또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한 근원적, 근본적 해결인 핵 폐기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6자회담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긴박해진 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노력해야 할 정책의 초점은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성권 위원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적 수단이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관론에 근거해서 남북관계가 좋아지거나 6자회담이 잘 굴러갈 경우에 대한 정책적 대안들은 정부에서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관적인 상황으로 빠져들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는 점에 대해서 그 균형감이 부족하다, 그런 카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안보적

불신감이라든지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추가해서 짧게 답변드리면, 어떤 정책이나 어떤 말도 경우에 맞아야 하고 때에 맞아야 합니다. 때가 아닌데 그런 말과 정책이 나오게 되면 부작용을 부르게 됩니다.

○이성권 위원 그 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때와 시기가 지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란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다 맞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혼선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보고서 마지막에 향후 대책방향에 북핵 불용이라고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러설 수 없는, 해석을 애매하게 할 수 없는 철저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핵이 자위수단이라는 주장은 합리성이 있다는 주장에서 다시 유보해서 일리가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불용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 해석의 소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현 정부와 관계 외교안보라인 자체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안이한 인식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북한의 핵 선언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북한을 제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 쪽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국내 일각에서도 경제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 정도의 대북지원과 관련된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금강산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과 같은 민간기업의 수익성 창출, 그러니까 자본의 논리에 의한 이윤창출을 위해서 행해지는 산업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야말로 민간사회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라든지 개별 NGO에 의한 지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쌀과 비료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사회가 기업의 이윤창출을 보장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NGO나 우리민족서로돕기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들은 지금의 단계에서는 제재를 가하거나 연계를 해서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지원문제는 한 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신축적인 연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신축적 연계를 할 때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밟아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국회라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로서 국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비료나 쌀과 같은 대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논의와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로 걱정도 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것 자체가 여론의 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월 10일 외무성 성명 이후 오늘이 열이틀 째입니다. 각국도 예의 상황을 냉정하게 주시하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정책기조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된다거나 재검토하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 저도 지금 전체적인 기조를 바꾸는 데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대북정책에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과의 공조체제가 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질의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만 듣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특히 북핵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핵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찾는 하나의 방법으로 정부와 여당과 야당이 초당적으로 참여하는 대북특사단을 꾸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정당 간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문제겠지만 정부에서는 이 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특히 대북문제는 한국사회 속에서 남남갈등과 분열이 많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어느 합의점을 이끌어 낸다는 면에서

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남북 국회회담이 중단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대북특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필요성이 여러 차례, 여러 경로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성권 위원 좋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 새해 바뀌고 처음으로 상임위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3시간 동안 대부분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장관님의 답변도 대개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습니다.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장관께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참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저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북한당국이 핵문제와 관련해서 해 온 언행을 보면 저는 참 안타깝고 가슴을 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마 정부도 난감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남북통일을 위해서 많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해 왔고 6자회담의 경우에도 나머지 5개국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평화적인 해결을 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중에서도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서, 또 한편에서는 양자회담도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사이드에서 해도 좋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보다는 레짐 트렌스퍼메이션(regime transformation)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공언되고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김정일 체제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략적인 차원에서만 북핵문제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접근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정부 측 특히 NSC 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일부장관께서도 난감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말할 부분은 좀더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 그동안 우리가 수년간 많은 대화도 하고, 협조도 해 왔고, 지원도 해 왔는데 저는 아까 몇몇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국군포로를 포함해서 그동안 납북되었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애당초부터 그렇게 해 주었더라면 지금쯤은 그런 부분에 결실이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정치를 하면서 북한문제를 선거나 정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바도 많이 보아왔고 느껴왔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없어야 되겠고요.

최근 리비아의 예를 보면 모든 국민들이 리비아 카다피에 대해서 아주 나쁜 독재정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리비아가 흔쾌히 나오니까 이제는 국제사회가 모두 리비아에 협조하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저는 북한정부도 국제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혼자의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북한의 김정일 당국이 국제적으로 개방도 하고 또 중국에도 여러 번 다니면서 경제개방에 대해서도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일국의 지도자인데 수백만 명이 굶어죽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 아프다고 그러면 인간이 아니지요. 오늘 국회방송에서 중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중국식의 개방이나 경제정책도 벤치마킹해서 북한동포들이 기아와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저의 목소리를 간절한 국민의 목소리로 듣고 김정일 정부당국이 정말 심기일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느냐, 있으면 한두 개냐 서너 개냐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매사 일을 할 때도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하듯이 북한의 핵문제도 있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우리가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아주 큰 틀에서 북핵문제를 보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몇 개가 있느냐, 있느냐 없느냐, 언제쯤 회담을 해야 될 것이냐, 말의 실수나 말의 꼬리 때문에 왈가왈부하다가 세월을 보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큰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주된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한 두 가지 원칙이 결

국 비핵화와 평화적인 해결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 정부가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문제를, 특히 북한 핵문제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연 중국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국도 나름대로의 복잡한 계산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아마 우리 국민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장관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보도에서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생각 안 납니다마는 북경대학의 유명한 정치학교수가 30여 명의 학생들 강의에서 동북공정의 깊은 뜻이 무엇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비친 적이 있습니다. 이것 보도한 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못 보았습니다.

○정의화 위원 마침 학생 중에 한국인 학생이 한 명 있어서 그것이 인터넷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동북공정의 깊은 뜻이 북한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장관께서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중국도 나름대로 자기 국익에 관계되는 방향으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을 것인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방향과 같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항상 다각도로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일에 있어서 물론 러시아나 일본이나 또는 유럽연합이나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만약 두 나라만 꼽으라고 하면 중국과 미국일 것입니다. 저는 미국과 중국이 똑같은 무게로 우리의 통일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외교적인 접촉이나 관계에 있어서도 균형 잡힌 외교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통일부에서도 그렇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북한에 대한 압박정책이 중국의 협조 없이는 효과를 내기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나라의 통일은 요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통일 대한민국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아무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더더구나 북한을 설득해서 '진정한 통일을 원한다면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개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 보유는 명백하게 통일에 장애물을 조성할 것입니다. 다만 북한은 핵 보유와 관련해서 이것을 포기할 의사를 밝히고 있고, '최종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해서 통일에 장애물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의화 위원 제가 끝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도주의적인 지원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인도주의적인 지원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국민정서도 있고 또 미국과의 관계나 여러 관계를 생각할 때 이번에 북핵 관련된 선언이 있기 이전의 수준에서 일단 동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동안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삼사십 년 전에는 맹장염에 걸려도 다 죽었어요. 장질부사를 우리가 염병이라고 불렀고 염병할 놈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 죽었어요. 폐결핵으로도 다 죽었습니다. 현재 북한의 의료실정은 6·25사변 직후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민간요법에 의존하고 있는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비료나 쌀 부분은 그대로 가더라도 북한의 그런 선언에 관계없이 의료 지원은 가능하면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회담이든 실무자회담이든 언제 재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북핵이니 뭐니 아무 관계없이 이것만은 우리가 돕고 싶다는 차원에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정부 차원보다는 NPO나 NGO의 차원이 좋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확인한 바로는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도 그 점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미국이나 한국이 핵문제나 군사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떠나서 북한의 동포들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인 애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북한 동포에게도 있고 국제적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가서 대화를 통해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부장관께서 그런 노력을 국회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도 여러 NGO 단체들이 북한에서 의료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통일부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대개는 다른 방법으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다가 접근이 안 되니까 의료를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이나 몇 곳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나와서 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끝으로 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다보스포럼에서 11월 APEC 회담에 북한이 참가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가 부산출신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2005년이 우리 민족에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물론 북미 간의 협의가 중심이 되어서 6자회담이 진행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한반도의 당사자로서 2005년 11월 하순에 예정되어 있는 APEC 전까지 북핵 해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2005년에 어쨌든 결판을 봐야 되겠다는 목표에 대한 문제해결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APEC이 한반도의 탈냉전으로 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면 부산 APEC은 훨씬 더 빛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정의화 위원님께서 특히 전문가로서 북한의 보건의료 지원에 대해서 정책대안들을 많이 제시하시고 또 구체적인 행동으로 개성공단에 그린닥터스병원을 개설해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북한의 의료수준이 6·25 당시 수준의 열악한 환경이라고 비교하셨습니다마는 정확합니다. 최근에 스티븐 린튼 박사가 북한의 보건소 180군데를 다녀온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북한의 의료시설은, 특히 지방의 의료시설은 너무도 형편없는데 그런 점에서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의료 분야의 인도적 지원은 앞으로 정부의 중점적인 정책개발 또 지원 분야로 삼아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범 위원님!

○박성범 위원 질의에 앞서서 오늘 회의 진행을 보면서 느낀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놓고 그동안 참으로 심도 있게 진지하게 토의를 해 오고 있는 위원회인데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국무위원이 면박을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면 위원회의 좋은 운영이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장관하고 의원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라면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야기 못할 것이 뭐 있겠느냐'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는 질의하는 위원과 답변하는 국무위원은 계급의 고하를 떠나서 완전히 다른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혹 적절치 못한 질의라도 국무위원으로서는 겸허하게 '국민의 대표가 틀린 질의도 하는 구나. 그러나 틀리면 틀린 대로 열심히 답변을 해야 되겠다'는 자세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위원 상호간에도 질의의 내용이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부분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질의는 위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태도나 내용이 좀 불만스러워도 그것을 회의 도중에 지적하는 것은 별로 성숙되지 못한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 오늘 거의 6시간 가까이 했는데 다 나왔습니다. 북핵선언의 의도가 무엇이냐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나름대로 하실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장관 답변 듣고 그렇게 만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뭐가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와 6자회담 거부 성명 이후에 정부 안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죽 스크랩해서 보

면 온도 차가 보입니다. 통일부장관 이야기의 뉘앙스가 조금 다르고 또 외교부장관의 이야기가 조금 다르고 또 국방부 다르고, 국정원 조금 다르고, 국내에서도 온도 차가 있고 또 우리 국내의 견해하고 미국 쪽에도 상당한 온도 차가 보이는데 장관께서는 NSC 상임위원장으로서 총괄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정부 안에서도 그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시각 차나 심각성이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여기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시각 차와 온도 차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외교부장관이든 통일부장관이든 국방부장관, 국정원장관은 북한의 핵능력에 관한 정부의 공식자료를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표현에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유하고 있는 문건과 정보는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감도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판단과 인식은 동일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범 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외무부장관이 이야기한 것을 뭉뚱그려 가지고 같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외교부나 국방부 쪽에서는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고, 통일부장관 말씀하시는 것 보면 실체가 없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느냐를 가지고 모든 책임이 언론으로 넘어갈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 조금 혼란스런 것은 사실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실체가 없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핵물질을 추출하고 핵무기를 한두 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추정된다는 정부의 공식판단을 특별히 외무성 성명으로 변경할 필요는 현재로서는 느끼지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박성범 위원 지원과 협력 분야에서도 온도 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비료와 식량을 인도적 지원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로 봐서는 인도적인 지원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전략적인 지원이 될 수도 있고, 특히 미국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외무부장관은 체니 만나고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뉴욕타임스는 비료 주지 말라고 그랬다고 보도하고, 그러니까 또 정부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도 좋을 텐데 공식적으로 '비료 주지 말라는 말 없었다' 이렇게 성급하게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또 국방성 부차관은 '비료 주지 말라고 그랬다', 결국 비료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도 미국 행정부는 무엇인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을 주는 것은 소망스럽지 않다는 뜻이 회담 속에서 충분히 오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한대사도 마찬가지이고 국무성 관리도 이야기했지만 '보상적 성격의 경협은 참가국들의 조율이 필요하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비료라는 말은 물론 없어요. 그러나 이 말이 갖고 있는 뜻 속에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비료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충분히 배어 있다고 봐야 맞을 것입니다.

이런 지원문제를 둘러싸고도 한미 간에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어차피 우리 정부당국자의 얘기를 근거로 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비료 문제나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 투명하게 또 당당하게 설명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비료지원 문제나 인도적 지원 문제는 남북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 갈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외교부장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성범 위원 지금 현재 북핵 사태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분위기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미국하고 일본은 압박을 가하는 입장에 있고 중국은 여러 나라에 요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설득을 하려고 뛰고 있고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은 좀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난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6자회담에 나오는 결정을 했더라면 한국의 국가 신인도를 올리게도 되고 또 국민들도 안심하게 되었을 텐데 안타까움이 있지요.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이것이 파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평화적 해법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선호 간사, 임채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범 위원 우리가 제일 가까운 당사국이면서 난처한 처지에 빠져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우리가 같이 가야 될 민족으로 생각을 하고 종국적으로 통일을 해야 될 상대자로 생각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와 더불어서 걸어갈 수 있는 상대로 생각을 한다면 차제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도 하고 지금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그렇다면 압박도 좀 하고 이것이 진정 우리가 북한을 민족으로서 껴안는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박성범 위원님의 고언에 대해서 정부로서 여러 가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법을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결과가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되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법에 대한 국제적 기대와 공감대가 아직 있기 때문에 한국이 그것을 등에 업고 열심히 노력해 가겠습니다.

○박성범 위원 예, 다른 거 짤막한 것 한두 가지 여쭈어 보지요.

얼마 전에 NSC의 북핵 관련 국가기밀문서가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보안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참여정부에 와서 정보공유 채널이 좀 넓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NSC의 일일 상황보고 같은 문건도 이십몇 군데 기관에 배포가 되고 또 거기에서 열람하는 사람들도 아무래도 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마는, 그래서 사후에 개선조치를 했습니다. 이제 문건으로 만들어 돌리지 않고 보안망이 갖추어져 있는 정부 내 인터넷망을 통해서 열람을 하는 제도 개선을 이루었고, 어떻게 그런 상황보고 문서가 닷새 분 열몇 페이지가 밖으로 유출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참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범 위원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질의인데 대북 경수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그것도 장기간 중단되면서 여기에 관계했던 업체의 손실이 지금 상당히 크고 이것을 보상해 달라고 해도 아직은 뾰족한 방안이 없는데 여기 한 여섯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쌀도 좋고 비료도 좋은데 이것이 국민적 공감을 얻어서 좀더 탄력을 받으려면 사실 기조 자체는 별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국민들이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주기만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북한에 끌려가 있는 국군포로 또 납북어부 이런 사람들을 정부가 북한과의 교섭을 통해서 데려온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국민들은 좀 더 주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텐데,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별로 성과도 없었고 남북 접촉이 있을 때마다 얘기는 한다고 그러지만 무슨 답변을 들었는지도 국민들은 잘 모르고 특히 국군포로가 연말에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참으로 아픈 얘기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제법 위반입니다. 상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여서 분리하게 되어 있고 국군포로는 국제법상으로도 떠난 나라로 송환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국제법을 어기는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더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해서 이제 넘어갔지만 다시 이 사람 하나라도 데려온다면 커다란 업적이 되고 대북지원은 참으로 원활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박성범 위원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일관되게 해 왔습니다. 이제 북한으로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와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제사회도 미국 의회의 대북인권법이라든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과 또 압박 수단 등을 논의하고 있는 이런 환경을 볼 때도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인권개선의 의지를 내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주요한 의제로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성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박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준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위원 요즘 참여정부의 장관, 총리들을 보면 너무 한심해요. 본회의장에서 내가 죽 보면,

마치 의원들에게 강의하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되레 화를 낸다고. 묘한 현상은 거꾸로 의원들이 참아요, 파탄이 될까 싶어서……

이번에도 아까 박계동 위원 질의를 보면 국회의원이 장관을 질책할 때 장관이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면 언성 높입니다. 우리 정동영 장관께서 국회에 계실 때도 그래 하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소리 지른다'는 표현을 장관이 어떻게 합니까? 아까 보니까 국회의원 보고 '소리 지른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장관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정동영 장관 트레이드 마크가 신사입니다. 그거 잘못했지요? 국회의원이 발언하는데, 장관도 국회의원 다 하신 분이 좀 질책한다고 그걸 '소리 지른다'고 그래 표현하는 것은 나는 언어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홍준표 위원 장관도 소리 질렀지요. 국회의원 하실 때 장관 질책하다 보면 장관이 제대로 말 안 나오면 고함지르지요. 옛날에 어떤 의원은 일어서고 고함지르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점잖지요. 장관 그래 하지 마십시오.

○통일부장관 정동영 저는 별로 그렇게……

○홍준표 위원 장관이 아까 대답한 것 중에서, '대북 핵문제를 발표하는 데 대해서 정부는 같다. 동일하다. 표현상의 차이일 뿐이다' 이래 말씀하셨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그렇습니다.

○홍준표 위원 지금 국방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이나 국정원장의 표현은 '핵무기가 한두 개 있다' 국방백서에도 나와 있고, 장관의 표현은 '핵물질이 있다', '12～20㎏ 플루토늄이 있다' 이래 표현했지요? 그건 장관께서 10월 4일 국정감사장에서도 그랬고 지난 2월 14일 본회의장에서도 그랬지요? 그래 대답했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구분해서 말씀드렸지요. 확실한 것과 추정을 구분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핵물질을 갖고 있는 것이고 추정은 핵무기를 제조했을 것으로, 가능성이 있는 걸 추정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장이고 외교부장관이고 표현은 같습니다.

○홍준표 위원 장관님! 장관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에도 핵물질도 추정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확실한 게 아니고……

○통일부장관 정동영 핵물질은 추출이지요, 추정이 아니라.

○홍준표 위원 '핵물질도 확실한 것이 아니다' 이래 죽 이야기하고, 장관이 또 지난번 10월 4일 국정감사장하고 본회의장 와서는 핵물질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92년 5월 IAEA의 사찰 이전에 추출한, 80년대 후반부터 계속된 폐연료봉 처리에 의한 플루토늄 이게 12～20㎏ 되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10～14㎏으로……

○홍준표 위원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홍준표 위원 그래서 핵무기가 한두 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지요.

○홍준표 위원 그 다음 두 번째가 2차 위기 발생 후 그러니까 2002년 10월부터 5㎿ 원자로를 가동 중단하고 꺼낸 50t, 8000여 개의 폐연료봉, 여기에서 추출했지요?

북한이 2000년에 추출했다고 이미 발표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저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홍준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핵물질에 대해서는 장관이 포함시켜 이야기한 일이 없어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본회의장에서 답변드렸습니다.

○홍준표 위원 이 두 가지는 이야기했지만 12～14㎏……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국정원장이나 국방부장관이나 또 외교부장관이 이야기하는 핵무기 1～2개 보유, 이것은 사실상 미 정부 당국도 똑같은 인식입니다. 그런데 장관은 그것조차도 확실치 않으므로 핵물질이라고 계속 표현해 왔어요. NSC를 총괄하는 장관 입장 이해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소프트 랜딩으로 가야 되겠다는 입장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장관이 북한의 핵 정보에 대해서 어둡다는 것 또는 알면서도 회피한다는 것 이런 핵물질, 핵무기 차이점하고 또 오후 내내 질타를 받았지만 최근에 장관이 6자회담이 곧 열릴 것이다 이런 발표한 것하고 이런 데 대해서…… 만약 정확한 정보력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자꾸 발표하지 않지

요.

핵문제를 다룰 때의 장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더 워스트 케이스(The worst case)를 가정해서 다루어 주시라, 그리고 장관 재임 중에 이 문제를 해결 못 해도 장관을 질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박관념을 가지고 내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가시적인 뭔가를 이루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북한이 지난번에 핵 보유를 선언했는데 그것을 굳이 주장이라고 축소 해석하시는 것이나 이런 것을 다 미루어보면 장관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국민들이 NSC 책임자로서 상당히 위험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통일부장관 정동영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위원 예, 하세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통일부장관이라고 해서 특별히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서 축소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정부가 북한 핵 능력에 관해서 판단하고 있는 평가자료는 NSC 상임위원들이 모두 공유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알고 있는 평가나 국방부장관이 알고 있는 것이나 통일부장관이 알고 있는, 우리 정부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있는 자료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부장관이라고 해서 북한을 의식해서 축소할 이유도 없고 핵 보유 능력에 관해서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 왔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위원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안보장관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내용상 다 틀리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굳이 강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대처해야 되는데 대처방법이 98년 6월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비료 지원을 하면서 이산가족 문제하고 연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단호히 거절하는 바람에…… 사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건 것이 포괄적 상호주의입니다. 100원 주면 100원 받아야 되겠다 이런 대칭적 상호주의가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세운 98년 6월까지 내세운 대북정책은 포괄적 상호주의입니다. 그때 비료를 제공하면서 이산가족 연계하니까 북측에서 반대했어요. 그 이후로 우리 쪽에서는 내놓은 게 없습니다.

통일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95년 6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상 대북지원이 16억 6071만 불입니다. 유상 대북지원자금이 18억 3500만 불입니다. 이것을 합치니까 유·무상 대북지원자금이 35억 불입니다. 한화로 3조 6000억이 넘습니다. 우리가 3조 6000억에 달하는 돈을 주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는 것은 뭡니까? 평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이에 북쪽에서는 핵능력을 계속 증강시켜 왔다는 거예요. 최근의 어느 일간신문을 보면 북쪽 원자로가 계속 가동하면 2014년까지는 100기 이상의 핵을 생산할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핵 실험을 안 했기 때문에 핵이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이스라엘이 핵 실험을 한 일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핵 실험을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에 핵이 200기 이상 있다는 것이 거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런 식으로 북에 시간만 주는 짓을 계속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번에 비료 50만t 준다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1600억 넘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2000억쯤 될 겁니다.

○홍준표 위원 그러면 2000억 돈이 또 무상으로 넘어가요.

1년에 오륙천 억이 평화를 위한 비용으로 계속 넘어가는데 그러면 북쪽이 최소한 핵에 관한 한은 양보라도 얻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한마디도 못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말로만 평화, 대화 그러는데 북이 말을 듣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을 이야기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달리 말하면 과거에 있었던 퍼주기 논쟁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홍준표 위원 퍼주기 논쟁하고 틀리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북에서 상응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만 하는 퍼주기다 이렇게 규정해 왔습니다만 이미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남북화해협력이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다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홍준표 위원 아니, 장관님!

지금 북의 핵문제가 크게 또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지원하자는 게 국민적 합의 아닙

니다. 그것을 국민적 합의라고 보면 곤란하지요.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핵에 대해서 우리가 앉아서 단죄하자는 게 아니고 왜 떳떳하게 요구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떳떳하게 요구하고 북 인권문제는 체제 문제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핵문제는 한반도의 문제라고요. 우리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하에서 핵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론하고 '계속 핵 개발하고 핵보유 선언하면 우리는 평화를 위한 비용을 못 내놓겠다, 인도적인 것 외에는 지원 못 하겠다' 왜 이런 말을 못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퍼주기라고 하면 곤란하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사태 발생한 지 2주가 채 안됐습니다만 냉정하게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6자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게 한 축에 있고 또 남북 간의 화해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안정을 구축해 가는 것이 또 한 축에 있습니다.

이것을 연계하라고 주장하십니다만 그동안 정부로서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연계 대신 병행 전략을 해 왔습니다. 분명히 북한의 이런 6자회담 거부, 무기 연기로 해서 어려운 상황이 조성됐습니다.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국민적 지혜를 모아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남북관계 발전이 핵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홍준표 위원 장관께서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대화와 타협, 화해와 협력, 그것만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됩니까? 나는 그게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홍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준표 위원 대안을 이야기하잖아요. 포괄적 상호주의로 나가 보라 이거예요. DJ정부 초기에 하던 정책입니다. 최소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 상호주의로 나가 보라 이겁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정부로서는 북이 핵을 포기하면 또 핵 포기과정에 진입하면 정부가 그동안 가다듬어 온 대북 포괄적, 구체적인 경제협력 지원을 현 단계보다 한 차원 높은 협력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계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륜 위원 앞서 위원님들 질의 속에 여러 가지로 확인된 것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것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답변이 곤란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몇 가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적됐지만 좀더 확실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2월 10일 북한 외무성 성명은 제가 볼 때 의외였고 실제로 우리 정부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신계륜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평가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지요. 지금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점이 분명히 밝혀진 것인데 이 점이 강조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정부나 통일부가 이 사태에 대한 성격을 규정할 때 이것은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여기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협상력을 제고시켜서 미국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고 그런 여건 조성에 목적에 있다고 정리한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신계륜 위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정리를 정부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북한의 성명발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정부의 공식설명이 되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신계륜 위원 그 두 가지 점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만약 그렇게 규정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는 중대하기 때문에 우리 대북한 통일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이것이 국민들한테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6자회담에 참여하는 주변 4개 국가에도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태 이후의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한

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기존에 가져왔던 정책의 무엇이 변화되고 무엇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기본적인 틀을 유지해 가면서 상황 추이를 일단 주시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지 열이틀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외교적인 협력과 간접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중국을 통한 6자회담 복귀선언 또 6자회담 관계국들 간의 양자·3자 순회방문 등등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긴박하게 진행해 오고 있고, 북한 내부의 동향도 예의 주시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북한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과 함께 북한의 그런 의도에 대해서도 보다 정밀한 평가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계륜 위원 다시 정리하면 외교적 노력과 병행해서 해야 할 일이지만 나라의 기본 기조에는 변함이 없고 그러니까 남북화해협력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습니다.

○신계륜 위원 변화는 없다는 것이고,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이 독자적으로 풀 수 없는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조건에서는 이를테면 우리는 인도적 차원의 교류를 빨리 속도 있게 발전시켜서 대규모 남북경협사업까서 발전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게 목적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말을 한다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나 경협은 지속해 나간다, 이것은 맞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신계륜 위원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무슨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달면 인도적 지원이 아니지요. 정치적 고려인 것이지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의 여러 가지 일들은 계속해 나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유엔도 모리 스트롱 사무차장이 오늘 아침에 식량이라든지 의료지원이라든지 인도적 지원은 흔들림 없이 해 나갈 것이다 또 WFP, 국제식량프로그램에서도 올해 예정된 대북 식량지원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그런 인도적 차원의 지원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신계륜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대규모의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눈앞에 전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현실적으로 핵 상황이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정책 기조에는 흔들림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제때 해야 할 일들을 제때 하지 못하고 진행되어야 할 일들이 진행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에 북한의 협조와 협력이 긴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계륜 위원 분명히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전반적인 수준에 있어서의 차질이 있을 수 있고 그 차질의 핵심은 북핵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압축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신계륜 위원 이 문제가 지금 위원들 사이에, 여야 간에도 서로 감도 다르게 질의하고 이해할 때도 서로 감이 다르게 받아들임으로써 '아, 그때 이런 말 했지 않소. 나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될 소지가 다소 있어 보이는 부분이어서, 명쾌히 칼로 긋듯이 잘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여건에서 볼 때 인도적 차원에서는 지속하되 대규모의 남북경협사업은 북핵 문제와 연관이 깊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현실적으로 직접·간접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는 겁니다.

○신계륜 위원 그리고 대북비료 지원은 인도적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협의할 일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셨기 때문에 큰 원칙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신계륜 위원 그다음에 개성공단사업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저는 조금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질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도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핵문제가 명쾌히 되기 전에는 개성공단사업이 더 악화되면서 상당한 곤란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를 들어서 상황이 나빠지면 개성공단에 들어가고자 생각했던 기업인들도 아무래도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꺾이게 될 것이고 또 정부로서도 그 같은 상황에서 일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신계륜 위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개성공단사업이 그렇게만 설명하면…… 아무 문제없이 개성공단사업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보는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정부로서는 개성공단사업이 갖는 실질적 의미와 상징적 효과 또 그동안 어렵게 여기까지 진행해 온 경과들을 돌이켜봤을 때 이것은 정해진 스케줄대로 일단 최대한 추진해 가겠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인들 문제도 있고,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 땅에 공단을 건설하는 것과 달리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결하는 데 아무래도 시간도 더 걸리고 노력도 더 들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속도를 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신계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소 미묘하게 들려서 제가 정리해 보았는데, 역시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미묘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만 보았습니다마는 요미우리신문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문제가 이번에 워싱턴에서 논의되었다고 보도됐는데 이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아직 미·일 간의 투 플러스 투 회담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신계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미국에 갔을 때 몇 분들이 6자회담 중에서도 중국의 중요성을 말하고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중요하지요.

또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현재 방북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워싱턴회담에 참여한 일본 외상도 이제 중국이 중재자로서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스 장관도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음을 잘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의 말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그러면서도 미국과 일본은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군사적 관점에서 분명히 경계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미묘한 상황입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최근에 중국도 방문하셨는데 중국의 역할을 과연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 중에서 한계를 말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장관으로서 말씀을 한다면 중국은 어느 정도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북한으로 봐서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중국과 남한입니다. 중국과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와 6자를 통한 평화적 해법이라는 데에서 정확하게 입장이 일치합니다. 또 북한이 가능하면 경제개혁과 개방조치를 통해서 제2의 중국 모델을 채택해서 경제적인 능력을 갖게 되기를 원하면서 북을 도울 능력과 북을 돕겠다는 의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6자회담의 중단, 무기 연기 사태를 맞이해서 한중 간에 아주 긴밀한 협력이 대단히 중요해진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6자회담 참여국 가운데 북을 6자회담에 참여하게 하는 지렛대는, 가장 강력한 힘은 중국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6자회담에 참여했을 때 그것을 타결짓게 하는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문제입니다만 북한을 6자 테이블로 안내하는 데에는 중국의 역할이 어떤 나라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계륜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입장은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6자회담에 임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기대를 않겠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상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종국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주도를, 누구나 그렇게 생각은 않겠지만 현재 남북관계를 전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6자회담을 견인해 나간다는 심정으로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장 임채정 신계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炳國 委員 정동영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북한 핵문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에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고 민족의 생사를 가름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2시부터 장장 4시간 동안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4시간 동안 빠짐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새로운 문제라든가 또는 정부가 명백한 입장이라든가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가 정비되는 감을 하나도 못 가졌어요. 도리어 더 헷갈리기만 하고……

한마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언어유희 아니겠느냐, 말장난 하고 앉아 있는 것 아니냐, 서로 면박이나 주고 목소리나 높이고 이런 것 아니냐, 좀 진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핵무기를 가졌냐 안 가졌냐 하는 소위 핵의 존재 문제에서도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부처마다 다르다 하니까 '그렇지 않다' 같은 자료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표현은 다르지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왈가왈부 하는데요. 한번 말한 것을 따져 봅시다.

국가정보원에서는 2월 15일에 '소형화기술을 아직 개발하지 못했고 한두 개의 핵무기는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것은 비행기에서 투하방식인 재래식 핵무기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날 정동영 장관은 '핵물질 10～14kg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하나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불확실하다' 또 그 전날 외교부장관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정보를 정밀하게 분석 중이며 지켜봐야 알겠다' 또 외교부차관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했다고 보기는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 국방부에서는 '플루토늄으로 한두 개 핵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 국민들 보기에는 이게 참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아직도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회담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있는 관계 때문에 나의 의도를 분명히 밝힐 수 없고 상대방의 목적 같은 것을 공개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때로는 나의 의도를 감출 수도 있고 상대방의 의도를 훤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정부에서는 용어 선택 하나라도 일관되게 갖추어야지요. 이런 것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하면 됩니다. 여태까지 이야기 계속 했으니까요.

또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도 무엇 때문에 가지느냐 할 것 같으면 '협상용이다 또는 체제 유지를 위한 자위용이다, 6자회담을 하기 위한 전략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략용이니 협상용이니 할 것 같으면 핵을 가져도 괜찮고 공격용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는 이야기인지 뭔가 헷갈리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2월 10일에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성명을 발표하니까 정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선언이 아니고 주장이다……' 글쎄요, 주장하고 선언이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장은 그저 그냥 그대로 자기들끼리 주장하고 객관적으로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고요. 이래서 혼동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무슨 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요.

우리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같이, 자꾸 국민들에게 별것 아니라고 안심시키려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것은 통일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는 민족이 정말 공멸하는 것 아니냐 하는 대단한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정부의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그 핵을 어디에서 사용하겠습니까? 협상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협상용 같으면 그 핵을 어디에 터뜨리겠습니까? 협상이 안 되니까 워싱턴에 터뜨리겠습니까, 북쪽에 터뜨리겠습니까, 모스크바에 터뜨리겠습니까, 동경에 터뜨리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재앙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체제가 붕괴하려고 하니까 자위용으로 했다면 그 핵은 어디에 써야 합니까? 사용을 어디에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회담에 임하고 국민들에게 안심도 주고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입장을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용어 선택도 통일되게 사용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 지원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비료는 인도주의 지원에 포함된다고 해 놓고 보고서에 보면 '그러나 이것은 추이를 봐 가면서 결정하겠다' 고 해 가지고 분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장관

은 무슨 여성단체인가 가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는 레드라인이 없다' 미국은 또 '레드라인을 깔아놨다'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비료 50만t도 미국에서는 '지원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는 '그런 것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우리 적십자사에서는 입장이 딱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지 여러 가지 국민들의 여론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뭔가 우왕좌왕합니다. 공식적으로 용어 선택도 해 가면서 여러 안보관련 기관들하고 해 가지고 통일을 하세요. 거기에 대한 입장도 좀 밝혀 주시고요.

우리는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핵만 포기하면 체제 보장을 해 주겠다' 북한 체제를 보장한다는 것은 분단 고착화 아닙니까? 우리는 통일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류협력으로서 사실상 통일된 상태로 지속하다가 어느 날 될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언어유희입니다.

그리고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데 북한 체제의 존재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반도 전체의 적화 아닙니까? 그러면 한반도 전체를 적화통일하는 활동도 보장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다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용어 정리해 가지고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진짜 연구해 가지고 용어를 정리했는지 다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아까 APEC에서 남북한 정상회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에 대해서 오는 11월까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여망을 이야기한 정도다 하는 쪽으로 돌렸습니다마는 분명코 장관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남북한 정상회담을 위한 추진사항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수가 궁해집니다. 쓸데없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말을 해 가지고 늘 책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목소리도 높이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이 질의하는데 엉터리라고 생각하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장관이 질의에 대해서 고성으로 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장관이 적정한 답변만 하면 국민들은 장관을 높이 평가할 겁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그치겠습니다마는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우선 북한의 핵 능력에 관한 정부의 대국민 설명이 헷갈린다는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북한은 92년도 IAEA 사찰 이전에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그 양은 10～14kg으로 추정합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한두 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은 2003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8000개의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를 완료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이 우라늄농축핵개발계획에 따라서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기 개발을 위해 관련 부품을 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것 역시 예의주시하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북한의 핵 의혹과 관련한 핵무기 제조 또 핵물질 추출, 우라늄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정부 내에서 통일된 인식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께 설명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반전, 반핵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군사적인 선택은 불가하다라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고 동시에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핵을 용인할 수 없다, 물론 현재 한반도가 그러면 비핵화 상태냐? 이미 비핵화 상태가 무실화된 것은 상당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음은 최 위원님께서도 잘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도 지원과 관련해서 왜 장관의 얘기와 뉘앙스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비료지원이 인도 지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게 예산도 대규모로 들어가고 또 국민적 합의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비료 지원을 이런 상황 속에서 일방적으로 정부가 결정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과 또 하나는 남북 당국 간 협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

겠다는 것입니다. 남북 당국 간 협의 없이 지금까지 비료 지원이 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이 정부가 갖고 있는 확실한 입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레드라인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금지선을 설정하는 것이, 그러면 금지선에 발을 디뎠을 때는 바로 액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를, 그것을 억제하는 행동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선택의 여지가 줄어든다는 전략적 고려에서 특별하게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레드라인을 현재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현재 남북장관급회담도 되지 않고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조차 미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회가 열릴 때마다 또 언론에서 늘 이 문제를 제기하고 관심을 갖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이 통일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7·4공동성명과 91년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6·15공동선언에서 남북은 서로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공존을 서로 약속했습니다. 그 바탕위에 남북화해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남북 간의 체제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즉 미국의 적대시 정책으로, 북한의 해석이 그렇습니다마는 야기되고 있는 북한의 체제 불안, 즉 북한이 무력침공할지도 모른다는, 체제전복을 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핵 포기와 바꾸겠다는 언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핵을 포기하는 목표를 위해서 북이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체제안전 보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을 그동안 일관되게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을 부정하는 것과는 전혀 맥락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崔炳國 委員 그런 질의가 아니고요. 체제를 인정한다고 하는 그 안에는 북한이 한반도 전체를 적화하려고 하는 활동도 용인해 주는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전체를 적화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활동도 체제보장에 포함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상호 체제 인정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지요.

○崔炳國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만택 씨 등 국군포로 송환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崔炳國 委員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이어서 정문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헌 위원 수고 많습니다.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 사실상 정책적인 대안이 한계를 갖는 상황에서 장관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장관께서는 북한의 핵 보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자꾸 말이 번복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판단해야 된다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북한이 핵 보유가 됐다면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되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결정적으로 깨져나가게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핵 보유는 일본의 핵무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국 정부도 한반도의 비핵화정책에 대한 심각한 재검토에 착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대만은 대만대로…… 이런 핵도미노현상이 동북아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확고하게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핵을 불용한다,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그 점에서 또 인접국가인 중국 역시 북한의 핵은 용납할 수 없다……

○정문헌 위원 그렇지요.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 동북아에서의 핵 확산 등 모든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당장 남북대화에 있어서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고 이것 때문에 북·미 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 과정에서 대단히 심각한 장애가 되고 우리는 지금 카운터 프럴리퍼레이션이냐, 저쪽 핵무장된 상태를 해제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에 귀착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방성 산하 정보기관인 DIA에서도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12개에서 15개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보도도 나왔고, 오늘 아침 전여옥 위원님 질의에서도 장관

께서 핵무기가 1개 정도 있다고 판단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고, 잠시 전 최병국 위원님 질의에서는 비핵화상태가 무실화된 것은 상당 기간이 흘렀고 이것을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북한 외무성에서 공식적으로 핵보유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북핵 불용의 원칙이 깨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핵무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은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역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정문헌 위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북한이 핵을 가졌나 안 가졌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지금 당장 오늘 언론보도에 의해서도 19일 미국, 일본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북한의 무조건적이고 신속한 6자회담 복귀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사태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는 대북 강경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졌다고 발언한 그 선언이 오늘 통일부 보고서를 보니까 "외무성 성명이라는 공식적 형식을 취했으나 핵보유 발언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봄", 이렇게 판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경론자들이 그들의 입지를 강화시킬 기반을 줬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안보리에 회부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강경 바람이 불었을 때 그들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말릴 수 있는 명분이 없는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본 위원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외무성 성명은 그동안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사실상 무실화시켜 온 위반, 비핵화선언에 대한 정면 위배의 폭을 더 넓혔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고립과 함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경한 국제여론의 입지를 강화시킨 것은 맞습니다.

○정문헌 위원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국제사회가 강경론 쪽으로 몰려갔을 때 중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말려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저들을 조속히 6자회담으로 끌고 나와서 이 일을 해결하도록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자꾸 6자회담에 나와야 된다는 당위론적 말씀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들을 6자회담으로 끌어내기 위한 대안이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당위론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로서 취할 수 있는 외교적인 노력과 한미 간의, 또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 일본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6자회담 유관국들 간의 공동 노력, 공동 대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미국과 일본은 좀더……

○정문헌 위원 그 노력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저들을 6자회담으로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6자회담으로 끌어내 오는 방법이나 핵문제에서 핵을 포기시키는, 아까도 장관께서 이제는 비핵화 상태가 깨졌고 정상으로 돌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난 프럴리퍼레이션(Non-Proliferation) 상태가 아니라 카운터 프럴리퍼레이션(Counter-Proliferation)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러기 위해서 저들을 6자회담으로 빨리 끌어내고 저들을 비핵화시키기 위해서 강경책 없이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경책을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을 주고 너희가 이런 식으로 이런 입장을 범했을 때 우리가 너희들을 강하게 단속할 수 있다는 정책적인 강경책이 없이도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협상력의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저는 대화도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될 국면……

○정문헌 위원 당연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균형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시 바삐 남북 간의 직접 대화채널이 열려서 이 문제를 빨리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적인 노력,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는 저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느냐 하는 정책적인 대안으로써……

장관,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우리 사회에서도

조직폭력배랑 이쪽이랑 둘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협상을 진행하는데 그냥 이쪽에서 계속 무엇을 뜯어 가는데 뜯기면서 너희 이런 짓 계속하면, 어느 선 이상 넘어가면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대처하겠다는 가이드라인 없이, 정책적인 협상력 없이…… 몰상식한 집단들이 계속 뜯어 가기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요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냥 주기만 하면 협상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정 위원님께서는 압박 봉쇄를 하면 우리의 영향력이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마는 94년도를 생각해 보면 당시 미국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외교를 통해서 풀려고……

○정문헌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헌 위원 94년도와 상황이 달라진 것뿐 아니라 9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폭격이 검토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풀어나간 것, 그래서 전쟁을 방지한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잘 처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북한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 강성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말려 줄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6자회담으로 끌어내고 빨리 포기하게 하는 것이 급한데 지금까지 똑같이 10년 동안 유화정책으로 끌었다 당겼다를 반복하는 식의 선상에서 유화정책만을 고집하실 것인지, 균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다 사용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전쟁불가, 압박 봉쇄가 별로 효과가 없고 북한의 붕괴 반대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북핵문제를 평화적 해법을 통해서 풀려고 노력해 왔고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문헌 위원 제가 균형을 강조하는 이유가 유화정책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유화정책 하나만을 고집해 와서, 얼마 전에 장관께서 잘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다면 균형을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이들을 빨리 6자회담으로 끌어내고 북한 핵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들을 다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정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일 북한의 발표를 보고 정부가 대응한 것은 참으로 침착하고 초기 대응으로서는 적절했다고 평가합니다. 또 국민들도 매우 차분하게 이것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이런 핵보유 주장이 우리가 개성에 가서 보고 주변 정황들을 볼 때 이것은 역시 공격적이라기보다는 방어적 성격이 더 짙다, 그리고 이것이 단기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세습까지 이어지는 체제안전과 관련된 문제로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재수단이 마땅치 않고, 또 함부로 제재를 했을 때 그나마 우리가 갖고 있는 지렛대를 잃을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주변 5개국의 힘 관계에서 종국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국이 충분히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는 관리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하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너무 초조해 하거나 조급해 해서 사태 판단을 그르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이것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되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평화 구도로 전진해 나가는 단계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악화 방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조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관계에서 이런 물밑 조율이 좀더 중요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공조 일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

제에 관해서는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과 미국, 일본의 입장이 마치 한쪽은 압박이고 한쪽은 설득이라는 식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5개국이 같은 보조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미동맹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힐 전 대사나 미국의 강경파들이 함부로 쏟아내는 압박적 발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와 핵문제에 대한 해결과 남북관계는 역시 병행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관계의 발전, 즉 대북지원이 단절되었을 때 과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료지원을 요청했는데 제 생각에는 작년 수준으로 일단 지원을 하면서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비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앞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할 때 작년보다 더 지원할 수 있는 채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남북관계는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후퇴시키는 방법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조금씩이나마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문제를 관리해 낼 수 있고, 독자적인 우리의 역량을 발휘하고 우리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물론 지혜롭게 조율이 되어야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종국적으로 우리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갖는 가운데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가장 결론적인 부분은 역시 미국이 좀더 유연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체제안전과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북한 핵 포기는 누가 보더라도 상호 대가적인 관계에 있고, 또 해결이 되려면 동시적인 시간적 타이밍을 갖고 해결되는 것이 해법으로서는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또 예컨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역시 북한과 미국이 얘기를 하면 서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는 6자 대화의 틀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6자 대화의 틀 내에서 양자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형식의 유연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 중요한 지적들을 하셔서 제가 간단히 제 입장을 정리해 봤습니다마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장관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전반적으로 핵 상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남북관계 해법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을 각별히 유념하면서, 어려운 국면입니다마는 국내적으로 사회·경제적 안정을 해치지 않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핵문제의 평화적 해법이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최성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짧게 해 주세요.

○최성 위원 보충질의에 앞서서 오늘 박계동 위원님께서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과 설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간단한 사실 확인 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야당 위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제기를 하면 의사진행에 차질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기를 하신 위원님들께서 발언시마다 과거의 관행을 이야기하시면서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대화, 또 장관이시기 때문에 어떤 비판에 대해서도 겸허히 경청하는 자세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구태의연한 관행을 깨자고 했을 때는 최소한 답변을 경청하고 무조건 윽박지르거나 동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히 수용하겠다는 내용 없는 답변을 듣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동시에 적어도 북핵문제와 같이 대단히 민감한 주제는 '어·아'에 따라서 다르고 '은·는·이·가'에 따라서 북한 핵이 핵이냐 핵물질이냐가 다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는 보충질의를 하려고 한 부분도 '분명히 오늘 핵무기를 하나 갖고 있다고 하셨지요?', 또 '앞에 동료 위원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듯이'…… 장관께서는 한 번도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추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장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라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서 그것이 또 다른 정치적인 공세로 되면 그것을 여당위원이 가만히 보고 듣고 있는 것이 동료 위원에 대한 존경스러운 태도인지, 그런 부분에서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기 위해서 여야 위원 모두, 여당도 무조건 정부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말 그대로 초당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내실 있는 접근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장관의 답변과 강도 높은 내실 있는 정책적인 비판과 필요하다면 책임을 묻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서 박계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한미외교부장관회담에서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는 논란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분명히 두 번 이상 '발표를 했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발표가 아니라 그런 언급을 했다는 부분들이 전달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문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핵보유 상황과 관련해서 말미에 '전여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하셨는데'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북한 핵보유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로서는 북한 외무성이 6자회담 무기 중단과 함께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하는 데 대해서 심각한 국면에 유의하면서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북한 핵능력과 관련해서는 일단 세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92년 이전에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한두 개를 제조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정보원이든 국방부든 통일부든 다 공유하고 있는 인식과 평가입니다. 그러나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추출한 플루토늄에 관해서는 아직 정확한 평가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라늄과 관련해서는 농축프로그램의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것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팩트에 대해서 그동안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고 봅니다. 혹시 통일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의 강조점이 다르다고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내용은 같은 것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 위원 장관님, 그 대목에서 국방백서에 나온 것처럼 북한이 핵무기 한두 개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했다고 그 가능성을 추론한다는 것하고……

○통일부장관 정동영 국방백서를 다시 읽어드리면 핵물질을 추출……

○최성 위원 보시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무기 한두 개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추출했을 가능성을 추론한다는 신중한 견해와 핵무기를 한두 개 제조했다, 그래서 핵무기 보유국가다 이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국방백서를 읽어드리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92년 5월 IAEA 사찰 이전에 약 10～14㎏의 무기급 플루토늄으로 한두 개 핵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국방백서의 내용입니다.

○최성 위원 그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습니다.

○최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田麗玉 委員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간단하게 해 주세요.

○田麗玉 委員 정동영 장관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아주 중대한 문제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핵무기 한두 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10～14㎏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10～14㎏의 플루토늄을 가지고 플루토늄 폭탄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증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유관국들은 모두 핵무기 한두 개를 보유했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정이고 확실한 것은 핵물질 보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핵물질에 대해서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추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핵물질 보유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고 이 자리에서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추정된다는 이야기는 장관의 레토릭으로 치자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이른바 핵물질 보유를 레드라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신보에서 '2005년은 북·미 정면대결의 해, 김정일 위원장의 더욱 대담한 결단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내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장관께서도 아시리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조치로 핵실험, 탄두미사일 발사, 핵물질 수출 등을 예상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북한의 추가조치는 전문가들에게서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핵물질 보유를 레드라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정부의 레드라인은 없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이 정부의, 통일부장관으로서의 레드라인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것과 방금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92년 5월 IAEA의 사찰 이전에 10～14㎏의 무기급 플루토늄으로 한두 개 핵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田麗玉 委員 그것이 아니지요. 지금 장관의 레토릭을 묻는 것입니다. 장관은 오전에 제 질의에 답변할 때는 '핵물질 보유를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아마 속기록에도 다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에서는 '핵물질 보유입니다' 이렇게 단정했습니다. 그러면 장관의 레토릭은 핵물질 보유라고 하는 것과 핵물질 보유를 추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회 본회의에서는 '확실한 것은 핵물질 보유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핵물질 보유를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말을 한다면 그 말이 그 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확실한 것은 국방백서의 얘기와 제 설명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田麗玉 委員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리고 레토릭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레토릭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 국방백서를 보고 읽은 것입니다. 국방백서를 보고 읽은 것과 제가 확인해 드린 것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田麗玉 委員 차이가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회의에서는 '확실한 것은 핵물질 보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맨 처음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는 '핵물질 보유가 추정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장관의 언어구사…… 이것이 장관으로서 같은 얘기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본회의 때도 그랬고 국방백서의 내용도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보유한 것은 핵물질이고 추정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무기를 만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백서 내용을 갈라보면 물질은 있는 것이고 무기는 제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부연설명드린 것입니다.

○田麗玉 委員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추정과 보유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확실한 것은 핵물질 보유입니다'라고 말한 것과 '핵물질 보유가 추정됩니다'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냐 이것이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핵과 관련해서 가장 확실한 것은 국방백서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의 평가와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자료를 정부의 국무위원들, 특히 NSC 상임위원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 국민들께 제대로 또렷하게 설명하지 못했느냐 하는 지적은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국방백서나 국정원의 자료 등등을 제 나름대로는 충실하게 설명했다고 판단합니다.

○田麗玉 委員 국방백서가 나온 것은 시간이 지났고 지금 핵무기는 리얼타임으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관께서는 언제까지 국방백서를 읽을 것이며 또 장관께서는 국방백서를 읽으면 정확하게 읽어야지 어떤 때는 '핵물질 보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떤 때는 '핵물질 보유가 추정됩니다' 이렇게 읽으시고…… 잘못 읽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최성 위원도 얘기

했지만 저는 이런 경우는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나중에 속기록을 보면 전 위원님 말씀이 맞는지…… 왜냐하면 오늘 답변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전 위원님이 이 자리에 죽 안 계셨습니다. 밖에 계실 때 다른 위원님들께도 여러 번 답변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관된 맥락이 중요한 것이지 왜 한번은 추정이라고 했다가 한번은 추정이라고 안 했느냐고 지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田麗玉 委員 제가 일부러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없었다 하더라도 저희 보좌관도 여기에 있었고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레드라인이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정부로서는 설정한 레드라인은 없습니다.

○田麗玉 委員 왜 레드라인이 없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핵물질 보유를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는데 우리는 당사자 아닙니까? 당사자로서 레드라인을 왜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금지선을 설정하면 그것이 갖는 효과의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금지선을 어겼을 때 반드시 금지선을 어긴 데 대한 대가로 취하게 될 행동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그동안 취해 온 이른바 벼랑 끝 외교전술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특정한 금지선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田麗玉 委員 이제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벼랑 끝 전술에 우리가 말려든 것입니다. 그리고 레드라인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누가 받느냐, 바로 우리 국민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을 장관으로서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정문헌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정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문헌 위원 아까 핵물질이냐 핵무기냐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맥락 말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쪽에서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무성에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상 우리가 빨리 저들을 6자회담으로 못 끌어내고 정상적으로 못 회복시키면 국제사회에서 강경론자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또 미일 외무장관회담에서 나왔듯이 강경론자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한다는 등 제재조치를 취할 때 말릴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데, 북한 핵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까 제가 정책적인 균형을 가지면서 쓸 수 있는 대안을 다 써서라도 빨리 끌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안 되었을 경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경우,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 제재로 갈 경우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상황 설정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장관님이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에 정부에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철저한 대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저희 위원들도 마음이 놓이고, 저희 위원들이 나가서 안보를 우려하시는 국민들이 있을 때 정부의 국가기밀에 대해서 정책을 펴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설명을 해 드리고 안심하라고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위원들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정부에서 정책이든 발언이든 설명을 할 때 그것이 때에 맞지 않으면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안보리 제재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일 간에 2+2 회담에서 이런 것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회담의 결과로 유엔안보리 회부 문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일본 언론이 라이스 장관의 답변내용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안보리 회부로 해석해서 보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여하튼 우리 국가와 우리 정부가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대책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 대책을 알아야 우리도 마음을 놓을 것이고 장관께서 지금까지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 비공개회의든 간담회든 어떤 형식으로든 이 상황이 극단적으로 갈 때 우리 정

부가 갖고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어떠한 시나리오들을 기초로 해서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 위원들만이라도 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정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장관한테가 아니라 저한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상황에 대한 판단의 문제니까 확실하고 분명하고 직접적인 상황이 왔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여러분과 논의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요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박세일·박성범·임종석·한명숙·정문헌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중 김문수 위원님 등이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2.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고진화 의원 대표발의)(고진화·강창일·김기현·김영춘·김재윤·박세환·박재완·엄호성·염동연·이상락·이원영·이재창·이해봉·장복심·정성호·진수희 의원 발의)
3. **北韓離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황우여 의원 발의)(황우여 의원 외 120인 발의)
4. **6·25전쟁납북자명예회복및지원에관한법률안**(전여옥 의원 대표발의)(전여옥·엄호성·이강두·이인기·진영·유기준·정종복·나경원·박찬숙·황진하·황우여·박계동·권영세·안택수·이윤성·이상득·안상수·서병수·고경화·박재완·김재원·박순자·안명옥 의원 발의)

(18시51분)

○위원장 임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6·25전쟁납북자명예회복및지원에관한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대표발의자이신 고진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는 황우여 의원과 전여옥 의원님께서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황우여 의원 존경하는 임채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황우여 의원입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여러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10만 명에서 4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되고 있고 대부분이 미혼인 청소년들이며 60%가 여성입니다. 이들은 강제송환의 두려움에 떨면서 불법체류자로서 중국 몽골 월남 캄보디아 러시아 등 만리 타향에서 하루하루를 숨어 살면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는 날만을 고대하면서 연명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강제적으로 윤락업소에서 일하거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매춘까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현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까지 국내 입국자만 52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 6월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세부현황을 보면 남성이 1541명, 여성이 2222명으로 여성이 월등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대에서 40대까지가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을 탈출한 북한주민들은 국내 및 타국으로 입국하여 인권을 보호받기까지 2중, 3중의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에 있음은 물론, 최근 중국 공안당국의 강력한 색출작업과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으로 인해 처형 및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가장 가혹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강제낙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 가족 모두는 배반자의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유와 생명의 보존을 위해 탈북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은 국가를 초월하여 국가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국가는 인권을 언제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지를 자의로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아가 인권 문제는 국가 간에 서로 감시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권장하여야 할 일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영토 조항에 따라서 사실상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북한주민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국적법상 국적취득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두 북한을 이탈한 때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지역에 거주했거나 그 지역 출신 주민들이 남한으로 들어올 경우 별도로 국적을 취득할 것이 아니라 간단한 절차로 대한민국 호적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고 있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을 이탈한 때로부터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함에 그 근본 취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신변의 위협과 인권유린 등을 당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이들의 보호 등에 유리한 국제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체류국 내에서의 강제송환금지, 신변보호, 인권신장 및 국내입국 등을 위한 국가의 외교적 노력의무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와 보호를 위한 방안 강구를 규정하는 한편,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재외공관 등 이들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직접 물리적으로 진입하여 보호신청하는 방법밖에 없어 상당한 위험부담을 하지 않고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이들이 직접 재외공관 등을 방문하여 보호신청하는 방법 외에 서신 전화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도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할 신분증명서로 여권을 발급하여 주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해외 유학생을 전혀 내보내지 않고 지극히 폐쇄적인 북한사회의 젊은이들의 교육상황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진정한 세계의 반열에 서서 발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장차 북한이 이들을 필요로 하고 이들이 북한에서 일하고자 원할 때에는 이들이 북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이 북한을 진정으로 돕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을 단순히 헐벗고 굶주린 우리의 형제로 대접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미래의 북한을 이끌어 나갈 동량으로 지도자로 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성공적으로 국내에 정착함에 있어서 필요한 교육 및 직업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이들이 장래 훌륭한 북한의 전문가,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도 이 법에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미 미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받아들이고 지원하는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웃 일본에서도 이 법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북한동포를 도울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회복한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법을 완비하지 않는다면 역사와 후손 앞에 부끄러움을 씻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의 제안설명의 취지에 따라 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여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麗玉 議員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여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6·25전쟁납북자명예회복및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의 많은 민간인들이 6·25 전쟁 당시 북한 당국에 의해 강제로 납북됐습니다. 정부기관인 공보처 통계국이 1953년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납북된 사람들이 무려 8만

40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정부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정부는 납북자 송환을 위해 북한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았으며 납북된 사람들의 생사확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6·25 전쟁 중에 아무 죄 없이 북한에 납북된 우리 국민의 소재를 파악하고 생존자와 유해가 귀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6·25 전쟁 납북자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혈육을 잃었습니다. 반세기 이상 동안 북으로 납치된 사람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해 왔습니다. 당시에 끌려갔던 납북자들은 이제 북한에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대부분 사망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혈육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해서 그 그리움이 사라지겠습니까? 가족들은 "제삿날만이라도 알았으면……" 하고 정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납북자 후손들이라는 이유로 연좌제 등 갖은 고초를 당해 왔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 법안이 제정되면 6·25 전쟁 중 강제납북자에 대한 생사와 소재가 파악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생존자들에 대해서는 영구 귀환과 가족방문을 추진하고 사망자들은 유해가 송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족들 가운데 당시 가장이었던 분들의 북송과 국가의 홀대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귀환납북자 또는 납북자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6·25 전쟁 납북자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본 의원의 법률안 제정안에 대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황우여 의원님과 전여옥 의원님께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체토론이 없으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제3항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항 6·25전쟁납북자명예회복및지원에관한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외교통상부의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

……

【제안설명서】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改正法律案

2005. 2. 21

국회의원 고진화

한나라당 영등포갑 출신 고진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며 제안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의 제안취지

현행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하면 남한과 북한의 주민 등이 서로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거나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 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함)를 소지하거나 방문 승인을 얻어야 것으로 규정(동법 제9조)되어 있는 반면에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발급결정을 통일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 제4항)

하지만 이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사항인 것으로 기본권의 법률유보에 관한 헌법 제37조제2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해야 할 것임

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에 이를 바로잡아 헌법위반적 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기본권의 보장의 정신을 고양할 수 있도록 동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법안의 주요내용

동법 제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통일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제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가 남북 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발급결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9조제4항 신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 설명드린 본 법안의 제안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어 뒤늦게나마 헌법정신에 부합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出席委員(21人)

권영길	김문수	김부겸	박계동
박성범	박세일	신계륜	신기남
원희룡	유선호	이성권	이화영
임종석	임채정	전여옥	정문헌
정의화	최 성	최병국	한명숙
홍준표			

○請暇委員(1人)

정의용

○委員아닌出席議員(1人)

황우여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김용구
전문위원	김성원

○政府側參席者

통일부

장관	정동영
차관	이봉조
기획관리실장	홍양호
통일정책실장	이관세
정보분석국장	김남준
교류협력국장	김천식
사회문화국장	고경빈
통일교육원장	박성훈
남북회담사무국장	황하수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	장선섭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조명균

【報告事項】

○議案回附

사회보장협정체결촉구결의안

(2004년 12월 31일 김춘진·손봉숙·황우여·김선미·김덕규·강기정·김태홍·문병호·이혜훈·김종률·이해봉·오시덕·유승희·정성호·제종길·현애자·조승수·오제세·박재완 의원 발의)

1월3일 회부됨

미주개발은행설립협정 수락동의안

미주투자공사설립협정 수락동의안

다자투자기금설립협정 수락동의안

대한민국정부와국제이주기구간의협력협정 체결동의안

(이상 4건 1월12일 정부 제출)

이상 4건 1월13일 회부됨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복구지원을 위한 결의안

(2월7일 정의용·김문수·김부겸·노회찬·박성범·원희룡·유선호·이혜훈·이화영·임종석·정병국·김명자·최성 의원 발의)

2월7일 회부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결의안

(2월17일 최성·유선호·배기선·김성곤·김혁규·신기남·장영달·한명숙·정의용·이화영·이종걸·고진화·이성권·최인기·우제창·노현송·이원영·이은영·장향숙·박명광·박영선·염동연 의원 발의)

2월18일 회부됨

○關聯議案回附

법률한글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

(2004년12월29일 정부 제출)

1월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政府組織法 一部改正法律案

(2월3일 정부 제출)

2월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